지역연구시리즈 07-09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9-02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주재우 · 김민수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지역연구시리즈 07-09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9-02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주재우 · 김민수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시리즈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인쇄일 2007년 12월 25일
발행일 2007년 12월 30일
발행인 李 景 台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예당문화인쇄: 02-2269-3202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http://www.kiep.go.kr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6099-0 94320 978-89-322-6089-1(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주 재 우 · 김 민 수

1.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 및 전략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을 외교안보정책 및 경제통상정책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상호의존과 지역화가 심화되고 경제발전 중심의 국가정책이 중시됨으로써 경제통상 이익이 국가 외교정책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통상 외교의 배후에는 결국 정치적 배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적 배경이 경제통상정책의 결정자로 활약하는 한 '경제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economy)'가 조장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국가의 경제통상정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통상정책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협상지위를 선점하거나 보다 유리하게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대북미 통상관계나 정책 역시 양국간의 전략관계를 논하지 않고 순수하게 통상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이른바 '샤오캉(小康)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통상부문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자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인 외교안보전략을 견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에 대해 취하는 미국의 통상조치가 순수한 경제적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 부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미국발 통상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통상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역시 국내정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6년에 출범한 캐나다의 신정부 역시 통상문제를 정치이슈(예: 인권문제)에 결부시키면서 캐나다의 통상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어 중국과 캐나다의 통상관계 또한 정치적 갈등의 구속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치적 갈등상황 속에서도 중국과 북미국가의 통상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어 양자간 통상관계에서 정치적 개연성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중국과 북미 간의 통상마찰은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북미국가들과의 통상마찰 문제는 단순한 경상수지 문제가 아닌 북미국가의 내적문제의 표출로 간주하고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 상승, 재정적자, 불균형한 경상수지 등을 포함한 내재적 문제는 중국의 환율 및 덤핑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미국가들은 자국의 내적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과의 통상마찰은 이런 내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2. 중국의 대북미 통상마찰 및 전략

경제통상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북미국가 간의 통상마찰의 가장 큰 배경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투자와 수출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가동함으로써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성장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국제무역체제에 편입하였고 2001년 WTO 가입 이후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현재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로 시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에게 다양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중에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과 함께 미국기업에 대한 더 많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통상전략의 핵심이다.

우선, 중국으로서는 환율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성장의 기조가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환율변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중국은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는 무역흑자를 줄여 통상마찰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다양한 시장장벽 등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소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려 하고 있다.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중국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섬유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 억제 등의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중국의 무역흑자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상계관세 부과, WTO 제소 등의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온양면의 대응전략'으로 상대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강력하게 맞대응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양보 및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제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향상, 그리고 기술력 제고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전략도 그 위상에 맞게 다변화되고 그 영향력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통상마찰에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통상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장경제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거나 무역구제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제무역체제 내에서 통상마찰에 대한 방어와 공세를 강화하는 수준이지만,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통상압력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하거나 중국자본의 해외진출 통로를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환율압력에 대해 중국은 외환보유고 다변화 정책 및 미국채권 매도 등의 대응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국부펀드의 세계 금융권 공략, 개인의 해외투자 허용 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다.

미·중 간의 통상마찰이 한·중 FTA 협상에 주는 시사점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대중국 투자의 자유화와 시장접근의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금융 및 서비스분야는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분야이다. 이 분야의 중국진출로 향후 한·중 관계의 향방을 좌우할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을 한·중 FTA 협상에서 먼저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미국에게 허용하는 수준에서 좀더 우호적인 입지를 얻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도를 제고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한·중 FTA 협상에서 능동적으로 협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3

제1장.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 및 전략 11

1. 서론 11

2. 중국의 대미 외교안보정책 16

가. 부시 정부 이후 미·중 관계 19

나. 미·중 관계의 갈등 영역 및 요인 25

다. 중국의 기대 해법: 대화채널 증축 28

3. 중국과 캐나다 관계: 최근 10년을 중심으로 30

가. 중국·캐나다 관계의 현황과 발전 추이 30

나. 중국·캐나다 관계의 협력 분야 및 이슈 34

4. 중·미 통상마찰의 정치경제학 39

5. 평가 및 전망 48

제2장. 중국의 대북미 통상마찰 및 전략 50

1. 서론 50

2. 중국의 대북미 무역현황과 통상마찰 51

가.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북미 간의 무역현황 51

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과 위엔화 환율문제 56

3.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60

가. 위엔화 환율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60

나.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한 중국의 대응과 확대되는 통상마찰 64

4.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중국의 전략 71

가. 미·중 간의 제17차 JCCT 및 제2차 SED의 합의내용과 성과 71
나.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와 능동적인 통상전략 79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84

참고문헌 87
Executive Summary 95

표 차례

표 1-1. 중국·캐나다 양해각서와 의향서의 협력분야(2001년) 35

표 1-2. 미국의 대중국 보장조치 사례 44

표 2-1. 미·중 간의 무역 추이 53

표 2-2. 현재 중국 위엔화 문제 관련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현황 58

표 2-3. 통상마찰 및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한 중국의 조치 66

표 2-4. 미국의 대중국 WTO 제소 현황 69

표 2-5. 제17차 미·중 JCCT 주요 합의 내용 73

표 2-6. 제2차 미·중 SED 주요 합의 내용 76

표 2-7. 최근 중국의 해외금융회사 인수 사례 83

그림 차례

그림 2-1.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54

제1장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 및 전략

1. 서론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은 대내정책(또는 정치)의 연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한 나라의 외교는 그 나라의 정치지도자와 정부에 의해 설정된 국가정책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국외에서 이런 정책목표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이다. 또한 역으로 국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외적인 방어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교정책은 국익 수호의 도구로서 외교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제시하는 국내정치의 산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 나라의 특정국가나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의 내용은 상당히 전면적이고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떤 특정 이슈나 문제가 다른 영역의 이슈와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이들 간의 인과관계는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두 나라 간의 통상문제에서 정치와 경제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상기한 논리에서 보면 한 나라의 통상정책은 국익뿐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산업, 군사 등 제반영역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의 이익이 그 나라의 통상정책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통상분야에서도 특정분야의 이익에 대한 반영비중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이들은 자신의 유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기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통상정책은 국가이익은 물론 국내산업, 기업, 이익단체, 유권자 등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동시에 이들 간의 조정 역시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치화되기가 용이하다. 특히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국의 정치신념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 통상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식될 경우 통상정책의 정치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와 국가간의 통상문제가 정치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간의 상호인식과 이해에서 출발한다. 두 나라 간의 통상관계는 상호득실, 이해관계의 철저한 계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이해타산 관계는 제도적 조정장치 부재시 정치적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정치적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한 나라가 어느 특정분야든 제반분야든 손실을 겪을 경우 상대국보다 국력이 강할 경우 정치적 압력을 통해 통상관계의 수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는 자국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고려된 상황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정치적 동기가 매우 농후하다. 이런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통상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자국의 경제, 산업, 상계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이런 문제점의 원인을 대외적 요인에서 규명하려고 한다.

둘째, 이 같은 노력의 효과가 미흡할 경우, 손실이 통상관계의 부정적인 요인, 즉 비정상적이고 불공평한 상거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이의

해결 전제조건을 정치적 요구의 충당에 결부시키는 것이다. 이는 손실을 입는 국가가 상대국의 대내적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양국 통상관계 왜곡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통상관계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전자는 정치적 조치를 마련하면서 이를 후자에게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정치적 조치는 입법화를 통해 법안으로 만들어지며, 전자는 이를 후자의 국내 상황의 개선 노력의 잣대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통상마찰은 정치적 갈등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통상제재' 또는 '경제제재'라는 극단적인 방법이다. 경제(통상)제재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분야나 제반분야에서 통상관계를 제약하거나 전면 중단 또는 동결하는 경제조치이다. 경제제재 조치에 정치적 동기부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재의 목표가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제재는 무력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되기 전 최후의 평화적 수단으로서 국제분쟁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다.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재대상국을 경제적 난국이나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자력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어 굴복하게 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다. 미국의 경우 제재 동기는 국제규범이나 보편적 가치를 위해하는 국가,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국가, 미국의 가치관이나 외교정책목표(예: 민주주의, 자유 등)를 위배하는 국가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경제(통상)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분분하나, 경제제재는 비폭력적으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경제제재를 가한 경우는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그리고 다른 한 번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1991년까지이다. 후자의 경우 제재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상당기간(1993~99년) 양국 통상문제의 정치화(인권문제와 연계)에서 잘 나타났다.

그러므로 통상관계의 분석에 있어 정치적 동기나 원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직 어불성설이다. 탈냉전 시기 초기에 일시적으로 경제이익이 정치안

보이익을 대체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났으나,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권력공백(power vacuum)'을 채우기 위한 세계전략의 근본적인 조정을 단행하면서 안보이익이 다시 경제이익을 대체하였다. 즉,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은 다시 전통적 안보이익을 중시하게 되었고, 경제이익은 대외관계에서 정치적 요구의 제약과 속박을 받게 되었다.

안보이익이 국제관계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양극에서 단극)는 국제관계의 운영방식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는 지역화와 세계화, 상호의존과 다자주의, 그리고 대화와 협력 중심의 체제로 전환시킨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 모든 운영방식의 개념이 국제관계에서 관철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관계가 신뢰(confidence)와 믿음(trust)의 기초상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협력과 대화를 통해 지역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내 국가간에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세계화의 병폐나 후유증, 그리고 상호의존에서 야기되는 불평등한 불이익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대화와 협력이 최선의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어 국제관계에서 신뢰와 믿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의 위상과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억제정책(containment policy)', 그리고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 전략을 자국의 이익에 따라 탄성적으로 활용하고 있다.[1] 이의 총체적인 산물이 오늘날 '일방주의(unilateralism)'로 표방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정치 영역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정치적인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즉 미국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비정치적 영역의 이익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일방주의의 득세는 비타협적이고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 강경대응이나

1) Shambaugh(1996).

무력 보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2] 2003년 발동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침공이 이를 실증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이란과 북한 정책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 및 전략도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운영방식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1997년부터 외교정책에 반영되는 이른바 '신안보관'의 정립과 1990년대 말부터 추구한 '책임 있는 국가(負責任國家)'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에서 영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 새로이 설정된 외교노선, 즉 '평화적 발전(和平發展)'과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에서도 조정 의도를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런 새로운 외교노선과 목표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환경과 체제 속에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현대화라는 최우선 국익을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외부세계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고 이런 요소들이 중국의 최대 국익에 위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21세기에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를 구현하기 위한 조정의 산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과 전략도 상기한 개념의 틀에 기초하고 있으며,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국가관계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이익관계를 위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수반되는 전략은 정상외교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자간 전략대화에 의존하고 있다.

2) Ryn(2003); 孫晉忠(2006); 賈慶國(2005).

2. 중국의 대미 외교안보정책

중국의 미국에 대한 외교안보정책과 전략의 기본 핵심 내용은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견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으로 극복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늘날 최강대국으로서 군림하기 위한 자국의 위상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는 비단 경제통상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자본, 그리고 기술의 필요성뿐 아니라, 안보 차원의 의미에서 보면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의 원활한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독립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에서 미국의 21세기 외교전략이 일방주의로 전개되는 것은 중국 외교에 상당히 큰 도전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중국은 제2차 북핵위기 사태 발발 후 미국의 중재 역할 요구를 수용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2006년도에 후진타오 주석과 부시 미 대통령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섯 차례의 전화통화를 진행하였다. 특히 4월의 방미 때 후진타오 주석은 부시 미 대통령과 이른바 21세기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로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이자 건설적인 파트너로서 중장기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의 원동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희망대로 더욱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는 기회가 되었다.

미·중 양국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는 이후 6월에 개최된 G-8 + 5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 바 있다. 미·중 양국은 국제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는 데 기타 서방세계와 입장을 같이

함을 확인하였다. 비록 이란의 핵문제에서 미·중 간의 이견이 표출되었으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큰 틀에서는 양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 근본적으로 인식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 즉 수반되어야 할 전략과 접근 방법상에서 양국의 이견차가 있다는 사실도 재차 확인하였다. 중국은 향후 이란 문제에 관해 미국과의 이견을 좁히지 않는 한 이른바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수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의 발전중국가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동 지역 국가에 대한 외교적 행태가 국제규범을 범하고 있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금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수단과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미국의 국익과 국제인권헌장에 반하는 이들과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안보 문제에서 미·중 양국의 협력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2006년 7월 탄도미사일 발사시험과 10월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UN 결의안에 대한 동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미국과 인식을 같이한다는 의사를 표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제안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경제·군사 제재에 대해 보여준 중국의 입장 차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자국의 이익중심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중국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가이미지 제고 노력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목적을 이번 결의안의 통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고화되었다.

그리고 양국은 향후 국제 및 지역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과 대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미·중 고위급대화(US-China Senior Dialogue)를 개최하고 있다. 2007년 네 번째를 맞이한 고위급대화는 지난 6월 20~21일 워싱톤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측의 대표로는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미국무부 차관이, 중국측 대표는 따이빙궈 외교부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화의 주요 의제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란의 핵무기 능력 억제, 다포의 인도적 사태,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구축, 인권문제,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대만문제, 대량학살무기 확산 억제, 미·중 양자관계 등이 포함되었다. 즉, 의제의 영역과 범위가 전반적인 국제문제에서부터 구체적인 지역문제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은 아프리카, 중동, 중앙 및 남아시아,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에서 양국이 당해년도에 진행한 분과별대화(sub-dialogue) 내용에 대한 상호 이해 정도를 검토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평등과 상호존중에 입각한 교류와 협력 증진,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공고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 상호신뢰의 제고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의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 양국의 국익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동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국관계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5차 회의는 2007년 말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

중국과 미국은 협력과 대화의 관계가 상호에 대한 이해 증대와 신뢰 구축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상호인정하면서도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런 양국의 공통된 인식은 외교, 안보, 군사영역뿐 아니라, 비정치적인 영역까지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미·중 양국은 2006년 12월 이른바 '중·미 전략적 경제대화(China-US Strategic Economic Dialogue, SED)'를 베이징에서 발족시켰다. 동 대화는 미국측에서는 재무성 장관을 대표로, 중국측은 국무원의 국가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겸 부주석을 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주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5월 2차 전략적 경제대화가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있다. 물론 대화의 결과는 실질적인 내용의 부재라는 혹평을 받고 있지만, 양국간에 적재된 수많은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이익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양국의 협력관계가 '신뢰구축'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군사 분야에서 양국의 이익갈등은 날로 제고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가 심화되면 비군사적인 분야, 특히 경제통상 문제의 갈등으로 확장될 수 있어 양국의 이익갈등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시키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례로, 군사영역에서의 이익갈등은 양국의 기술이전 문제와 기술협력 분야에서 내재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양국간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입장은 지난 2006년 2월 3일 미 국방부가 출판한 「2006 국방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동 보고서에서 중국을 향후 미국과 군사적 경쟁 가능성이 제일 큰 나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자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3)]

가. 부시 정부 이후 미·중 관계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세계 유일강대국의 위치와 위상의 유지를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이른바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주된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른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를 표방

3) 林宏宇(2006).

하는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최대 목표는 국제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국제질서의 구상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이 표방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전략은 결국 미국의 국익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세력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이들의 부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 이들의 대외 영향력을 미연에 차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방주의 전술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자국의 국익에 대한 도전세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국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외국의 대외적 행위의 적부성 여부는 철저히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미국의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식될 경우, 미국은 자국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타국이나 국제사회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의 연원은 부시 대통령이 2001년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 시기로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내에서의 신보수주의의 움직임은 그 이전부터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9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중동지역에 대해 비교적 온화한 정책노선, 즉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공화당 진영에서는 사실상 이에 반대하는 노선으로 신보수주의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일례로,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 2001년 부시 대통령의 첫 임기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나, 사실상 1999년부터 공화당 내부의 신보수주의의 중진세력에 의해 이미 이런 시각과 개념이 제기되었다.

신보수주의 진영이 또한 이런 개념에 의거하여 외교적 역량을 확대해 나간 시점 역시 이 시기였다. 이 같은 시기적 배경에는 공화당의 1998년 미국 중간선거의 승리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공화당은 중간선거의 승

리를 통해 미 의회를 장악하여 미국의 외교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미국의 일련의 외교적 결정과 사건에 대한 신보수주의의 노선이 피력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좋은 예로 당시 미 의회는 중국과의 WTO 양해각서에 대한 미 행정부의 동의안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미 공군의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에 대한 중국의 사과 요청에 반대를 주도하였다. 또한 신보수주의자들은 미 행정부의 대북 중유 공급에 대한 제재 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대통령의 부결권 행사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미 의회의 분위기는 강경하고 강력한 외교정책과 노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신보수주의가 맹아하기 시작한 동시 급속하게 성숙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통해 공화당은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를 미 대통령으로 선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부시 미 대통령이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신보수주의 세력은 신보수주의와 일방주의를 동시에 표방할 수 있는 외교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조는 미국의 가치관과 세계(질서)관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견제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확장시키는 것으로 변모하게 된다.

부시 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외교 관련의 인사에 신보수주의자(이른바 '네오콘(neo-con)')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신보수주의 노선의 외교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결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첫 연설인 연두교설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최초 공식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는 북한, 이란, 이라크 등 3개국을 이른바 '악의 축(Axis of Evil)'로 명명하였고, 이들에 대해 강경노선 정책을 펼칠 결의를 밝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신보수주의자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노선 의지는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의 주요 원인은 9·11 테러이다. 9·11을 겪은 미국은 즉각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ism)'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주목적과 기조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런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이 당면한 최우선적 정책과제는 우선 자국 외교에 새로운 목적과 기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력을 판별하는 것이었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보이지 않는, 매우 기동적인 적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이의 성공여부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데 기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을 위시한 네오콘들은 일방주의를 테러와의 전쟁의 중요한 전술로 활용하면서도, 자국의 외교정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과 지지 확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는 이른바 '나 아니면 그들'이라는 이분법적이고 냉전시대적 사고로 '편 가르기'를 하면서 세계질서 재편 구상의 도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9·11 테러 사태 이후 중국은 미국의 대터러 전쟁 노력에 즉각적인 지지 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지원할 의사를 공표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침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활동을 지원을 위해 중국 내에 아프가니스탄의 인접지역(예: 운남성(雲南省)을 미국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1979년 말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사태로 인해 수집한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및 지리 관련 정보를 미국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 또한 미국측에 전달하면서 미국의 신망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이런 중국의 호의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외교적 지지에 대해 미국도 중국의 호의와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중국의 테러주의(terrorism)에 대한 기본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지 원인은 두 가지 요인에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 역시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 역시 테러문제가 비단 미국의 문

제뿐 아니라 세계화의 진화과정에서 전세계가 위협받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양국의 불신과 잘못된 인식이 불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공통분모로도 작용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지지와 미국의 대중 인식의 변화가 미·중 양국관계에 미친 영향은 상당한 가시적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일례로, 2003년부터 양국의 고위급 국방회의 및 교류가 재개되었다. 그리고 콜린 파웰 전 미국무부장관은 당시 미·중 관계를 '닉스-키신저의 극비 방문' 이후 최고의 절정기라고 호평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압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6자회담을 주관하고 개최하기로 한 결의 역시 이런 양국관계 개선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외교적 지지 또한 대중 관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테러와의 전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3년 3월에 발발된 이라크 전쟁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이라크의 대량학살무기 체계에 대한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에서 야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학살무기에 대해 자국이 수집한 정보만으로도 이라크가 국제협약을 위배하고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중국이 반대 입장을 갖는 또다른 원인은 전쟁의 자국이 경제안보이익에 대한 함의를 상당히 부여한 데 기인한 것이다. 중국은 이라크 전쟁이 페르시안걸프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대한 국제적 함의가 내재된 것인 만큼 국제사회와의 논의와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즉, 중국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의도와 목표를 이라크의 석유자원에 대한 선점과 새

로운 중동지역의 석유수급 질서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전후 미국의 이라크 재건사업 역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입장은 성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동시에 어떠한 행동조치도 수반되지 않았다. 중국의 소극적 반대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작용하였다. 우선, 중국은 국제문제가 자국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위해하거나 위배하지 않을 경우 당사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위해할 수 있거나 지리적으로 근접한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중국은 외교적 수사의 차원을 떠나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국의 반대 입장을 관철하여 왔다.[4] 둘째, 미국의 일방주의를 제약할 수 있는 세력 동원의 실패 또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5개국 중 러시아, 프랑스와 함께 중국 등 세 나라가 비록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이들이 공동으로 미국을 저지할 의지가 사실상 부족하였다. 당시 러시아 역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2001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처해 있었으며, 중국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을 저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셋째, 중국은 대만의 분리운동과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주변지역의 불안요인을 자국 외교의 우선과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만의 분리운동 분위기는 2003년 초부터 대만의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역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대만의 독립정서가 고조되고 위험수위가 가시권에 들어오

4) Jisi(2004).

면서 미·중 양국관계의 의제에서도 이라크 전쟁보다는 대만 문제가 더욱 중시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성을 한층 더 인식하면서 대미국 관계의 개선에 주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3년 중국은 SARS를 겪게 되면서 국내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변질되면서 동 문제의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정국을 맞이하게 된 사실도 이라크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외교적 행동을 피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미·중 관계가 일련의 국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개선 및 발전의 단계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새로운 도전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미·중 양국은 테러와의 전쟁, 북핵문제, 대만문제, 그리고 SARS 문제로 인해 관계 개선을 하는 정기를 맞이하면서 양국관계를 공조와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양국관계에 내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나. 미·중 관계의 갈등 영역 및 요인

9·11 테러 사태로 인해 미·중 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양자 차원에서 존재하거나 잠재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역부족이다. 9·11 테러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제적 이슈가 국제관계의 발전 추세를 확정짓고 오늘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도전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로 이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과 강대국 간의 화합과 공조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이 유발한 협력관계가 기존에 존재하거나 잠재하고 있는 국제적 문제, 특히 양자 차원에서의 문제를 잠식시키지는 못했다. 미·중 관계 역시 열외는 아니었다. 2003년 미·중 관계가 발전하고 강화되는 시기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동시에 양국관

계의 내재적 모순과 문제는 다시 표면화된 것도 사실이다. 양국이 당면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은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안보영역에서 양국의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우선 대만 문제가 양국의 갈등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1년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공식 선포한 것은 대만에 대한 정책을 보다 우호적이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시킬 의지를 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미국의 전방위미사일방어전략(TMD)에 대한 대만 참여 계획, 대만에 대한 무기공급 증대 의사, 그리고 대만의 독립문제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견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다른 안보갈등 문제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에서 야기되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일본과 이른바 '신가이드라인'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국가안보이익과 상관있는 지역의 유사시 사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미국은 자국의 세계전략조정의 필연적인 결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누수 현상을 동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그리고 개입을 통해 충당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변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맹국과의 일련의 전략적 조정을 단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본과 호주, 그리고 동남아지역의 소수국가(예: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와의 전략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유사시 사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다. 미국은 특히 일본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보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일본과 이른바 '2+2(외교와 국방장관)회담'을 신설하여 외교 및 군사 차원에서의 양국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복안도 마련했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두 번째 갈등영역은 미·중 양국의 상호전략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

롯된 상호인식의 문제이다. 상기하였듯이 미국은 중국을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미국의 위상에 유일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판단하여 '전략적 경쟁자'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중동지역에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증강시키는 행위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 동남아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동맹관계의 조정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헤징(hedging)전략'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의 전략적 행위에 대해 불신하고 오해하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역시 중국의 발전중국가에 대한 정책과 전략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한 자국의 이익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당히 이기적인 책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 그리고 번영이라는 모토 아래 발전 중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정당화 및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인권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이른바 '불량국가(rogue states)'를 배제하지 않고 이들과의 관계도 다른 발전 중 국가와 같은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서구의 베이징당국의 발전중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이에 대응책으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불작전으로 대응하였다.

세 번째 갈등영역은 경제통상 분야이다. 미·중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의 성격과 본질은 상호보완적이면서 불가분한 관계인 동시에 필수불가결한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시장개방 부족으로 대중 무역구조가 만성적자를 탈피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

의 하나로 중국 통화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외적인 요인을 이유로 통화시장의 즉각적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범위의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양국의 중국통화에 대한 문제는 2005년 7월 21일 중국이 위엔화의 결제체제를 단일체제에서 바스켓통합체제로 전환시키면서 일단락 맺어졌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 역시 미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직접 경험하면서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정치성을 통감하게 된다. 중국은 자본압력을 받고 있던 미국 석유회사 유니칼(Unical)을 인수하기 위해 공개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미국 정부를 비롯한 의회는 초당적인 노력으로 이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미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저지하면서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한 중국의 진출을 막는 동시에 석유산업에서 우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합리화하였다.

다. 중국의 기대 해법: 대화채널 증축

미·중 양국의 갈등문제는 미국이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중국의 부상 결과를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로 규정하는 한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미국이 초강대국의 위치에서 신흥강대국세력에 대한 견제와 저지 노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는 이런 세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존의 초강대국들은 이들의 부상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동맹이나 연맹을 강화시킬 것이고, 이는 군사경쟁이나 이로 인한 불신과 오해(misperception)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권력이전'의 이론이 주장하듯 기존의 강대국과 신흥강대국 간의 충돌이나 전쟁의 결과는 자명한 것이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은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협력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협력과정이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소의

제약에 속박되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은 21세기의 국제정치, 특히 아시아의 국제관계 운명이 양국 관계의 발전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아시아지역을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대화채널의 구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이전의 대화채널은 영역별(issue-area) 또는 현안(issue-specific)에 따라 그 의제와 초점이 결정되었다. 경제통상 마찰이 있을 경우 양국의 경제통상 관련부처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되었고, 이런 장을 통해 양국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모색하였다. 인권문제 역시 국무원 및 관련부처 간 협상이 진행되었다. 국방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의 군사안보문제는 기타 부처가 배제된 가운데 양국의 국방부 간의 의견이 조율되고 상호이해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양국의 현안문제는 관련 부처 간의 논의와 협상에만 제한됨으로써 매우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관점과 시각에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규모의 경제가 날로 증대되고 이에 힘입어 중국의 종합국력과 대외적 영향력이 비례적으로 증대되는 현실에서 미·중 양국의 현안문제를 어느 한 영역에 집중하여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일례로, 미·중 양국의 경제통상 문제는 이제 인권문제와 결부된 것이 아니고,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영역에서 양국관계의 영향을 쉽게 받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의 문제에 대해 양국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입장은 군사적인 이유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협력 문제 역시 양국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공통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안보적인 맥락에서 사고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이다.

미·중 양국의 갈등 영역과 현안들은 그 차원이 다원화되고 영역범위가

상충되거나 개연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파생되는 문제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갈등문제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인식이라도 하듯이 미·중 양국은 부시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이른바 '미·중 전략적 대화'를 신설하여 양국의 갈등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럼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 때는 양국의 경제통상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 '미·중 경제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양국은 군사영역에서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급한 국제사태의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 미·중 양국은 다양한 다자포럼(예: APEC, ARF, WTO, UN, G-8 등)을 양국 정상은 물론 고위급 외교관계자들 간의 논의와 협상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3. 중국과 캐나다 관계: 최근 10년을 중심으로

가. 중국·캐나다 관계의 현황과 발전 추이

최근 중국과 캐나다는 양국 정상과 고위급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동된 인식을 갖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발전 중 국가이며, 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광활한 선진국가인 동시에 환태평양권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다. 둘째, 양국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이다. 중국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캐나다는 풍부한 자연자원, 강대한 자본능력과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상호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천

연자원 및 에너지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중국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셋째,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안정적이고 규범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는 인식이다. 캐나다는 지난 1989년부터 이른바 '태평양 2000 전략(Pacific Strategy 2000)'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이 전략의 전제조건은 중국의 지역적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 역시 이런 관점에 상당히 동의하며 캐나다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을 강구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5)]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은 1997년 양국관계를 전면적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협력우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 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2003년 12월 캐나다를 방문하였고, 캐나다의 폴 마틴 총리가 2005년 1월 중국을 방문하였다. 밴쿠버 APEC 경제지도자회의 이후 후진타오 주석은 국가주석으로 8년 만에 캐나다 방문 길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중국과 캐나다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그 결과 에너지, 무역, 투자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른바 '전략적 실무그룹(Strategic Working Group)'을 발족시켰다. 또한 국내지도자의 상호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은 또한 의회차원에서도 서로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양국 의회는 중국–캐나다 및 캐나다–중국 의원협회를 각각 설립하였으며 2006년도 기준 7차례의 교류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6)]

이 밖에 무역경제공동위원회(Trade and Economic Joint Commission)과 농업공동위원회(Agricultural Joint Commission)를 발족시켜 양국간의 무궁무진한 협력 잠재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적극

5) Keith(1992).

6) Lu(2005).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2005년 7월 1일 캐나타 총리 폴 마틴은 중·캐나다 수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결과 양국은 많은 분야에서, 특히 에너지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정하는 일련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천연가스, 핵발전, 청결에너지, 샌드오일을 포함한 석유자원 등을 협력의 우선분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에너지관련 문제에 대한 협상은 이른바 중·캐나다 에너지협력 조인트실무그룹(China-Cananda Joint Working Group on Energy Cooperation)을 2003년에 설립하여 정기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양해각서에 기반한 것이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또한 캐나다의 석유파이프라인의 최대 회사인 엔브릿지(Enbridge)와 알베르타주의 샌드오일 유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서부 연안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2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2005년 9월 후진타오는 캐나다를 방문하여 폴 마틴 수상과 앨버타 주 주지사 제너럴 클락슨과 양국의 관계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광범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7개의 협력서와 양해각서에 체결하였으며, 이들의 내용 범위는 항공운항, 철도, 식량안보, 검역, 핵발전, 그리고 의학연구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결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양국관계를 정의한 것으로, 이는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상당히 높게 평가된다. 양국은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이 양국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세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였고,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의 실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캐나다 정부 역시 이른바 '태평양 게이트웨

이(Pacific Gateway)'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증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한 무역·투자 및 교통의 요충지(hub)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무대에서의 양국의 협력 또한 결실을 맺었다. 양국은 환경문제, 전염병문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고 있으며, UN 개혁문제에서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상해의 2010년 엑스포의 유치권을 획득하는 데 캐나다가 지지한 동시에, 중국 역시 캐나다 휘슬러시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하였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캐나다 양국 관계 역시 이익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양국의 이익갈등은 작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서 나타났다. 새로이 당선된 캐나다 총리 스테판 하퍼의 정상회담 요청을 후진타오 주석이 거절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퍼 캐나다총리는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의제에 인권문제를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후 주석이 거절하였다.[8] 중·캐나다 양국관계는 폴 마틴 전 총리 재임시절과는 달리 하퍼 총리의 취임과 함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 폴 마틴 전 총리는 경영인 출신으로 중국 시장과 경제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대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정책을 견지했다. 그러나 그의 기업 스캔들의 연류는 그의 연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퍼 총리는 보수정당 출신으로서 국민과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지도자이다. 그는 2006년 신임총리로 선출되면서부터 미국 정책노선에 근접한 외교정책노선을 추구할 것을 공약했고, 이런 그의 의지는 대중국 관계와 정책에서도 처음부터 드러났다. 그는 특히 중국의 인권문제에

7) Huikang(2006).

8) *CBC News*(2006).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문제에 있어 미국의 정책과 노선에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의 정당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현재 캐나다 의회의 의장인 제이슨 케니는 오랫동안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해 온 인물이고, 그는 또한 티벳의 유배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인권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기 원하는 인권강경론자인 하퍼 총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9)]

그러므로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방향은 두 지도자 간의 문제에 대한 이견과 인식 차이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양국의 관계가 중·일 관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일 관계의 예를 고려해도 이런 정치적 이견이나 갈등이 양국의 경제협력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되고 있다.

나. 중국·캐나다 관계의 협력 분야 및 이슈

지난 10년 동안의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매우 순조롭게 발전하였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중국은 책임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았으며 이런 호평 중에서 캐나다의 중국 전문가나 학자들 역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양국은 1985년 이후 처음 이루어진 1997년 11월 장쩌민 전 중국국가주석의 캐나다 공식 국가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이른바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였다. 이후 양국은 최정상급 지도자부터 고위급 실무자들 간의 교류가 확대 발전하였고, 이들의 회담 및 협의 내용을 토대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비즈니스 등 많은

9) Jiang(2007).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2월 진 크레천(Jean Chretien)은 이른바 '캐나다 국가팀(a Canadian national team)'이라는 대규모 단위로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일련의 협력서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전문가교류, 사법개혁, 서부개발 분야 등에서의 협력과 개발에 대한 의지를 양해각서(MOU)와 의향서(Letter of Intent) 교환을 통해 확인하였다(표 1-1 참고).

표 1-1. 중국·캐나다 양해각서와 의향서의 협력분야(2001년)

형 식	협력분야
양해각서(MOU)	에너지, 전문가교류
의향서(Letter of Intent)	환경 및 기후변화, 사법개혁, 서부대개발, WTO 가입, 57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사업계약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경협분야에서 양국은 1999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 합의를 경제무역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후 이를 반영하듯 양국의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확연하게 증대하였다. 일례로 2006년 양국의 총교역량은 전년동기대비 2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31.8억 달러를 초월하여 신기록을 작성하였다. 2007년 1월에서 6월까지 양국의 교역규모는 이미 168.1억 달러를 달성하여 전년동기대비 35%의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중국의 대캐나다의 수출은 기록적인 29% 증가하여 그 총액이 107.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고, 수입은 47% 이상 증가하면서 60.7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 지금까지 양국의 교역량은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2002년까지 만해도 4대 교역국이었던 중국이 2004년에 캐나다의 2대 교역

국으로 부상하였고, 캐나다는 2004년 중국의 10대, 2006년에는 11대 교역국이라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다.[10)]

중국과 캐나다의 경협관계는 날로 증대하는 직접투자(FDI)의 규모와 건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의 대중국 투자는 1980년 시작 당시 그 규모와 건수가 상당히 저조하였으나, 최근 들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2년 기준 캐나다의 새로운 대중국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그 수가 708건에 달하였고, 계약총액은 11억 5,000만 달러 정도이나 실제투자액은 5억 8,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3년 4월 기준 캐나다의 중국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6,235건이었으며, 그 계약투자총액은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실제투자 역시 33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캐나다의 주요 투자분야는 석유개발, 기계산업, 전자산업, 커뮤니케이션, 화학산업, 경공업, 식품, 섬유, 농업, 수산업, 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서비스산업 등으로, 이 중 80%가 생산성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투자지역은 20개 성과 자치구지역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광동성, 사해시, 장쑤성, 푸젠성과 산동성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2002년 중국은 4개의 신기업의 캐나다 진출을 허가하였으며, 이들의 총투자규모는 208만 달러였고, 이 중 양국 정부의 투자금액 123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2002년 기준 캐나다에 진출한 중국기업의 수는 144개로 이들의 계약투자금액은 총 7억 5,700만 달러이며, 이 중 중국정부가 합의한 투자금액에는 4억 3,6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양국의 직접투자 규모 및 건수는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대중국 직접투자 누적 건수도 이로서 10만 145건에 달하였으며, 실제투자총액(누적기준) 역시 56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중국의 캐나다에 대한 총투자금액도 20억 1,600만 달러로 200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캐나다 주요 투자분야는 자원개발, 공업생산, 건축업,

10) EU와 ASEAN 등 지역경제블록이 하나의 교역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농수산업, 식종업, 과학기술문화교류, 교통운수와 컨설팅부문이다. 이 밖에 중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간의 발전협력은 1983년 「발전협력에 관한 중국과 캐나다의 총협정서(中國和加拿大關卸發展合作總協定)」에 서명한 이래 농림, 석유, 교통, 교육, 통신, 환경보호, 인재개발, 체제개혁과 빈부퇴치 등의 영역에서 110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총투자금액은 7.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양국은 2002년까지 합의한 과학기술과 경제기술 분야의 협력 25개의 양해각서에 조인한 바 있다. 특히 에너지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합의가 상당히 가시적이다. 1994년 중국과 캐나다 양국의 정부는 베이징에 평화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에 합의한 이후 1995년 친산에 CANDU 핵발전소 건설에 합의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997년 친산(秦山) 핵발전소의 신용합의를 하면서 이는 양국의 최대 투자사업으로 부상하였다. 2002년 12월 31일 친샨 핵발전소 1호기 발전기가 예정완공일보다 43일 빠르게 완공되었다. 그리고 2003년 7월 2호기 발전기의 전기전송망의 연결로 본격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중국의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캐나다의 자연자원부가 협력 양해각서에 조인하였으며, 2001년 중국의 국가개발계획위원회와 캐나다의 자연자원부 간의 에너지분야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또한 2001년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캐나다 자연자원부는 「에너지영역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關於能源領域合作的諒解備忘錄)」, 2005년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캐나다 자연자원부의 광산자원협력대화시스템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中國國家開發委員會與加拿大自然資源部關於建立鑛産資源合作대話機制的諒解備忘錄)」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캐나다 자연자원부 및 원자력유한공사의 핵에너지영역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中國國家發展改革委員會與加拿大自然資源部, 加拿大原子能有限公司關於核能領域合作的諒解備忘錄)」를 체결하였다. 이에 준하여 양국은 2006년 11월까지 중국·캐나다 광산자원협력대화를 세 차례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2007년 6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

원회와 자연자원 부간의 중국·캐나다 에너지협력 3차 연합실무회의 또한 개최되었다.[11)]

농업분야에서 중국과 캐나다는 1998년 중국 농업의 지속개발전략과 영양관리 프로젝트(the Project on Nutritional Management and Strategy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임업분야에서도 중국의 임업국과 캐나다의 자연자원부 간의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동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의지가 확인되었다. 1999년 양국은 중국의 동물산제품의 캐나다 수입 의정서(the Protocol on China's Import of Animal Products from Canada)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3년부터 양국간 중국·캐나다 농업 혼합 위원회(China-Canada Mixed Committee on Agriculture)가 연례적으로 정기 개최되고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중국과 캐나다는 21세기를 향한 중국-캐나다의 환경보호 프레임워크의 성명문(Sino-Canada Statement on the Framework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Oriented towards the 21st Century)과 환경보호협력에 관한 중국·캐나다의 행동지침서(Sino-Canadian Plan of Action concerning Environmental Cooperation)에 각각 1998년과 1999년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 양국정부는 WTO회원과 서부대개발, 사법개혁,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분양서의 협력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양국의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이 밖에 양국은 문화, 교육, 군사 분야에서도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인사 및 실무 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12)]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전략이 중국의 대미, 대캐나다 통상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크다.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이 북미국가와의 통

11) 『雙邊關係』 중국외교부 캐나다 홈페이지 참고 (http://www.fmprc.gov.cn/chn/wjb/zzjg/bmdyzs/gjlb/1938/default.htm) (dd: November 20, 2007).

12) "Bilateral Relations," 중국 외교부 캐나다 홈페이지 참고 (http://www.fmprc.gov.cn/chn/wjb/zzjg/bmdyzs/gjlb/3382/default.htm) (dd: November 20, 2007).

상마찰을 직접 야기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된 것인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정치지도부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외교안보영역에서 설정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노선과 전략수단이 비정치적 분야에서 견지하고 있는 기본입장의 근거가 된다.

4. 중·미 통상마찰의 정치경제학

미·중 양국 관계의 발전사를 회고해 보면, 양국의 통상관계와 외교관계는 불균형하게 발전해 왔다. 중국은 미국의 직접해외투자(FDI)의 최대수혜국인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최대수출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통상과 외교 관계의 불균형적인 발전구조는 국제관계사에서 선례가 없으며 상당히 난해한 모순적 현상이다.[13] 미·중 통상관계가 양국의 정치외교관계와 비례성이 결여된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무역관계가 정치관계의 악화로 인해 장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둘째,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이 양국 정치관계의 발전에 양호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정기간의 양호한 정치관계가 통상관계를 촉진시키는 조속한 효과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14]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관계를 종용한다. 우선 국가간의 충돌 혹은 예기된 충돌이 국가간의 교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경제행위자가 충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간의 무역액은 기타국가와의 무역액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민주주의 국가 또는 제약 국가(limited state)의 경제통상에 대한 간여가 상

13) 郭益耀(2001), p. 15.

14) 宋國友(2004), p. 8.

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15] 셋째, 국가는 일반적으로 교역을 통해 상대방의 군사력이 증대될 경우 상대국과의 교역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16] 특히 자유무역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경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의존도의 심화에 따른 충돌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이 무역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지도자들은 주요무역국가와의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미·중 양국의 관계에서 보면,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해도 통상관계가 괄목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국의 무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공동전략이익과 경제이익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중 정치관계와 경제관계가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역행적으로 발전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국가간의 공동전략이익은 공통적인 인식에 근거하며, 공동의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 양국의 공동위협이 소실될 경우 정치적인 관계는 악화된다. 양국의 공동이익이 상호보완적일 경우, 상호수요에 따라 경제이익의 보완성이 경쟁성보다 크면 양국의 경제협력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17]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의 미·중 양국의 정치경제관계는 정치와 경제영역을 분리해서 분석하기가 난해하다. 이는 양국의 전략이 공생하고 있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정책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미·중 양국은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s)과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s)에 의거하여 서로에 대한 외교안보전략과 통상전략을 제정, 추구하고 있으나, 결국 공통된 이익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하는 한 상대적 전략적 이익에 편중

15) Morrow, Silverson, and Tabares(1998), pp. 649–662.

16) Gowa(1989), pp. 1245–1255.

17) 閻學通(2002), p. 17.

하고 있다. 이는 양국의 통상정책이 국내정치와 정책에서 연장선상에서 결정되는 국내정치적 요인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1) 통상마찰에 대한 인식의 차

미·중 양국의 통상마찰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특히 중국 전문가에 의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학자들의 평가와 분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원인과 배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중 통상마찰의 주체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과거 미국의 통상마찰 국가와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학자는 우선 미·중 양국의 통상마찰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마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경제발전수준과 경제실력이 다른 두 나라 간의 마찰에 해당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양국의 무역구조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무역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의존한 가공무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중 양국의 무역마찰은 '미·중 마찰'이 아닌 '미·미 마찰'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8] 이는 중국의 무역구조에서 해외투자자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이상을 선회하고 있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나 무역불균형이 중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일방적인 책임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19]

둘째, 미·중 양국의 무역구조에 대한 인식차이다. 중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은 양국 무역구조의 불균형적인 발전, 즉 한 나라가 일방적인 흑자를 누리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1979년 미·중 양국의 무역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18) 이의 구체적인 근거는 2004/05년 기준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이 4만 4,800개 이상이며, 이들의 총 투자액은 48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500대 기업 중 400개 이상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張奇·王元龍(2005), pp. 45~52.

19) 周林(2006), p. 88~92.

통계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규모는 1979년 24.5억 달러에서 2003년 1,263.3억 달러로 연평균 17.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미국측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이 대중 무역에서 흑자를 누린 기간은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단 4년이다.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2003년에는 1,239.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무역은 1979년부터 1992년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1993년에서야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1993년부터 2003년 10년 동안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9.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3년 586.1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국제수지이론에 의하면, 무역적자의 증가는 대외 무역승수의 작용으로 미국 국민수입의 하락을 유발하고, 국민수입의 하락은 실업의 증가를 야기하며, 이는 곧 무역마찰로 나타난다.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양국의 경상수지가 국민총생산(GDP)의 1.5%를 초과하면 통상마찰의 결과를 초래하고, 2%가 초과될 때 보복성조치가 따르고, 25~30%를 초월하면 정치적인 문제로 승화된다는 것이다.[20] 미국측의 통계에 따르면 양국의 무역수지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3.79%에서 2002년 8.33% (1993년 기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양국의 통상마찰은 보복성 시기에 진입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련의 보복성 무역조치를 중국에 가하기 시작했고, 이는 오늘날 반덤핑제재조치나 특별보장/보호법을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조업에서부터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이 위해 받는 고도의 산업에까지 적용시키고 있다.[21]

20) 柳劍平(2005), p. 417.

21)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반덤핑제재건수 중 경공업품, 방직품, 화공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의 88.8%에서 1990년대에 70%, 그리고 최근에는 22.2%로 하락하였으나 같은 기간 기기 및 전자제품에 대한 제재비중은 1980년대의 5.5%에서 최근 16.66%로 상승하였다. 岳晉峰(2005), p. 39.

2) 일련의 특수법안: '특별보장' 법안

중국이 미·중 무역마찰의 성격과 배경이 정치적이며, 정치적인 동기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는 특히 중국의 WTO 가입 후 미국 정부가 이른바 '특수법안'을 왕왕 적용시키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이들 특수법안들은 두 종류로, 기존의 무역관련 법안들로 과거 다른 국가들에게 적용한 적이 있던 것들이다. 다른 한 종류의 법안은 중국의 WTO가입 후 중국을 겨냥하여 제정된 특정 법안을 의미한다. 이들 법안의 유용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주장은 다자무역체제에서 차별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자국의 무역체제 내에서는 차별성이 농후하여 정치적 성격이 농후하다는 것이다.[22]

선례에 비춰보면, 미국은 GATT의 제19조 또는 이른바 '보장조항'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GATT가 정한 범위 제약을 벗어나 유권해석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이 조항의 제3조례를 자국의 수입시장을 보상 또는 보조무역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적용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조치를 통해 이른바 '자발적 제한 협약'을 수출국으로부터 이끌어 내면서 이들과 '자발적 수출제한'에 대한 합의도 도출한 바 있다.[23] 그리고 이런 선례를 중국과의 통상관계에도 십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측의 관찰결과이다.

기존의 법안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WTO의 16조항과 '337조항'이다. 이른바 제337조항은 미국의 「1930년 관세법」의 제337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기업의 기소하에 수입품의 불공정무역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이다. 제337조항은 일반적인 불공정거래의 수입품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나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사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

22) 朱穎(2005), p. 43.

23) 특히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이 일본에 대해 취한 일련의 법적 조치에 대한 연구는 朱穎(2005), p. 43 참고.

중국에 대해 337조항이 발동한 건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구조에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상품이 증대하면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제무역위원회가 미국 기업의 제소를 받아들여 337조항을 적용한 건수도 2003년 6건에서 2004년 3분기 동안 6건으로 증가하였다.[24)]

표 1-2. 미국의 대중국 보장조치 사례

시 기	조 항 내 용	비 고
2004년 12월 1일	미국방직품협의집행위원회의 중국원산지 견직물(제620조례)에 의거 특별보장조치 입안 조사 진행	미국방직단체협의회와 미국노동자협회와 공동 신청
2003년 11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편직물(브래지어, 잠옷 등)에 대해 특별보장조치와 쿼터제를 실행 결정	
2003년 9월 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원산지의 연성주철의 급수부품에대한 특별보장조치 조사 실시	
2003년 2월 1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원산지의 철사틀에 대해 특별보장조칠 취할 것을 미대통령에게 건의	2003년 4월 25일 미의회 역시 이에 동의 건의함
2002년 8월 21일	미구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 원산지 베어링모터기기에 대해 특별보장조치를 위한 조사 실시	WTO가입 후 첫 '특별보장조치'위한 조사

자료: 張璐(2005).

또한 최근에는 「1974년 무역법」의 제421조(이하 421조항)와 중국의

24) 張璐(2005), p. 36.

WTO 가입의정서 제16조, 그리고 실무그룹보고서(Working Group Report)의 제242조에 의거하여 중국에 대한 '보장조치'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421조항은 전문적으로 중국을 겨냥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는 2000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켜 중국에 정상무역국가지위를 부여한 '미·중 관계법'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74년 무역법에 추가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의정서의 16조와 동일하다. 이로써 미국은 WTO의정서의 제16조항을 국내법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른바 미국무역법 '201조항'은 1974년 무역법의 201~204조항과 관련된 것으로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집행법」에도 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국내산업이 외부로부터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경우 수입제한조치(예: 고관세, 쿼터제 등)를 취할 수 있는 동시 손실을 입은 기업과 산업에 보조를 할 수 있다.[25]

421조의 경우 역시 중국을 겨냥하여 제정된 법안이나 중국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WTO를 위배하고 있어 미·중 통상마찰의 근원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미국은 조사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중국 수출상품을 이용하여 무역전이를 통해 미국시장에 진입한다고 판단되면 중국에 대해 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26] 이는 WTO 규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동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합의한 16조항과 242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측은 이러한 법안의 법적 차별성이 이를 실행하는 기구에서도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보장조치의 조사와 제재를 결정할 수 있으나, 중국의 방직품에 대한 보장조치의 조사기관은 미상무부 소속의 방직품과 의류국(OTEXA)이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는 OTEXA 산하의 방직품협정집행위원회(CITA)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25) 朱穎(2005), p. 43~50.

26) 朱穎(2005), p. 46.

CITA는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익집단에 의해 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측의 주장이다.[27)]

이 밖에 미국은 비관세장벽조치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자국의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는 데 상당수준 의존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조치는 전통적인 무역제재 수단으로서 미국이 중국의 날로 증가하는 교역상품의 미국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다. 과거 미국은 전통적 경공업, 방직의류, 농산품, 식품, 의약 등의 품목에 비관세장벽을 상당히 적용시켰으나, 오늘날 이 영역이 신개발 기기 및 전자제품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제일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2002년 중국 수출기업이 받은 비관세장벽제재 중 27%가 미국에 의한 것이었으며, 경공업과 기기전자제품의 손실액은 34.7억 달러에 이르렀다.[28)]

그리고 미국은 중국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제고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식품위생안전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가식품가공업자연합회(NFPA: National Food Processing Association)와 식품안전관리국(FDA) 같은 주요 관련기관에서는 중국의 식품제품의 품질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들의 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중국전문가들의 보편적인 평가이다. 또한 미국은 이른바 '사회적 책임 표준' 등급을 제정하여 중국 제품의 미국시장 진입을 또한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 등 선진국들은 1997년에 이른바 '사회적 책임 능력 8000(Social Accountability 8000, SA8000)'이라는 제도를 마련, 이를 2001년에 수정을 거친 후 기업의 도덕규범의 국제적 표준화를 도입하였다.

27) 朱穎(2005), p. 45 참고.

28) 張璐(2005), p. 36.

3) 시장경제지위 승인문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문제는 부여국가에서 중국이 보다 유리하게 반덤핑조치나 보장조치를 피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반덤핑 분야에서 2014년까지 이 지위의 부여를 유보할 수 있다. 중국측은 미국의 시장경제지위 결정에 정치적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2002년 테러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지원과 지지가 매우 필요한 미국이 하루 아침에 러시아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사실에 있다.

시장경제지위 부여문제는 반덤핑 조상 중 사용되는 하나의 개념을 반덤핑 조사 과정 중 수입품이 비(非)시장경제국가에서 수입된 덤핑물품이나 보조금 지원제품으로 확정되면 제3국의 대처가격을 책정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은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협약의 선례에 의거하여 문제를 처리하였으나, 이후 미·중 양국의 WTO 양해각서와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의 제15조에 의거하여 미국은 중국이 아직 시장경제국이 아님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WTO 가입 이후 15년 동안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체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29]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남용으로 인해 '비시장경제조항'이 미·중 무역마찰이 미시적인 영역에서 거시적인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30] 일례로, 2004년 6월 미국의 상무부가 중국의 시장경제 문제에 대해 첫 청문회를 개최하였을 때 당시 상무부장 에반스는 중국의 노동자본과 화폐세 환율이 앞으로도 중국의 시장경제 문제를 결정하는 관건요인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공식입장을 밝힌

29) 張璐(2005), pp. 34~36.

30) 張璐(2005), p. 36.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문제는 앞으로 미·중 양국의 무역마찰의 새로운 수단이 되었으며, 미국 등 선진국 등과의 거시경제 차원에서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5. 평가 및 전망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전략이 통상정책에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우선 중국과 북미국가간의 대외관과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중국과 북미국가의 통상마찰은 지속될 것이다. 인식의 차이는 양자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양자간의 신뢰 부족은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로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미국가가 제기하는 통상문제의 정치적 개연성을 일정 정도 존재한다고 가정할 것이고, 이런 가정하에서 통상문제는 정치화가 될 여지가 있다. 특히 중국은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경상수지흑자)를 점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이들의 정치적 통상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주장하면서 실사구실(實事求是)의 원칙하에 가급적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간에 공통전략 이익의 보완성이 미비하고 중국을 경쟁국가로 인식하는 한 통상문제의 정치화는 지속될 것이다.

둘째,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이해 차이가 향후 중국과 북미국가간의 통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외교안보전략이 중국의 부상을 평화적으로 이끌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북미국가의 대중국외교안보정책의 기조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갈등' 또는 '충돌' 불가피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정책을 전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대응정책은 통상영역에서도 상당히 부각될 것

이다. 이 역시 북미국가가 중국의 부상 발전 방향이 평화적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감의 부족에서 기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압력은 당분간 중국의 부상을 평화적으로 견제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북미국가는 중국의 현대화 속도와 이의 대외적 팽창을 제어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셋째, 중국과 북미국가 간 정치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통상관계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동시, 문제시 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과 북미국가의 통상관계는 정치적 악천후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이 같은 정치적 악화관계는 문제를 더욱 정치화할 수 있어 문제의 해결 역시 정치적 접근을 요구한다. 본문에서 주지하였듯이 통상문제의 정치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은 최근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고위급 포럼을 최근 설립하였다. 이러한 포럼이 양국의 신뢰를 구축하고 증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캐나다의 통상관계는 당분간 정치저인 문제의 개입을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산업 특성상 캐나다는 중국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된 캐나다정부는 중국과의 통상관계에서 정치이슈를 개연시켜 자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중국은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양국이 최근 체결한 일련의 협력서, 특히 에너지분야의 협력합의서에 대한 캐나다정부의 이행 의향에 대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중국정부 당국에게 새로운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 양국관계의 향후 5년 동안의 발전방향도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장

중국의 대북미 통상마찰 및 전략

1. 서론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30년간 연평균 9%의 고성장을 이루어 왔으면 2001년 WTO 가입에는 그 성장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낙후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이미 세계 3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고 2010년에는 독일과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할 전망이다.[31)]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국제무역체제에 일대 지각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외국인직접투자와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외환보유국이 되었으며, 한편으로 중국으로부터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과 EU 등 선진

31) 중국이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기준으로 8%에 달하고 있다.

국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무역수지 문제는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다양한 통상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으로서는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지속성장을 위해 이러한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면서 국제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무역 강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 등 선진국 간의 통상문제를 점검하고 중국의 대응과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으로서는 그동안 중국의 부상에 따라 대중국 무역흑자 등 혜택을 누려 왔으며 대중국 투자 등을 통한 제3국 수출효과도 높아 미·중 간 통상관계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의 내용은 비단 중국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중 간의 통상관계는 정치적 경쟁구조와 경제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협력과 갈등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상현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중국의 대북미 무역현황과 통상마찰

가. 중국경제의 부상과 중국·북미 간의 무역현황

중국의 대북미 통상전략, 특히 대미국 통상전략의 기본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발전전략과 현재의 세계경제 속에서 미·중 간의 통상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은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투자와 수출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가동함으로써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성장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국제무역체제에 편입하였고 2001년 WTO 가입 이후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유리한 투자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였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 수출되는 새로운 무역구조가 형성되었다.

우선 미국측 통계에 따른 대중국 수입규모를 보면 1980년 12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2년까지 21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그 후 2000년까지 다시 약 4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그 성장속도가 가속화되어 2006년까지 훨씬 짧은 기간에 약 3배로 성장하여 2,878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무역의 성장으로 인해 현재 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역동적인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은 15.5%를 차지하며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국의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수입증가율 부문에서는 중국이 전년대비 18.2% 성장함으로써 캐나다의 4.5% 보다 훨씬 앞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중국이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로 2007년 7월에 미국의 월별 대중국 수입액이 285.8억 달러, 대캐나다 수입액은 244.7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중국이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32] 미국의 수출대상국으로서도 중국은 2006년에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수출증가율 부문에서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240% 성장(연평균 23%)을 기록하여 동 기간 미국 전체 수출증가율 33%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으로

32) GTI(2007); US Census Bureau(2007a, 2007b).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5.3%에 불과하다.[33]

이와 비슷하게 중국측 통계에 따른 수출규모를 살펴보아도 1980년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미국 수출규모는 1992년까지 약 9배로 증가하였고, 그 후 2000년까지 6배, 다시 2006년까지는 약 4배로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2,035억 달러에 이르렀다.[34]

표 2-1. 미·중 간의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계			중국의 대미국 무역통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80	38	12	26	10	38	-28
1992	75	257	-182	86	89	-3
2000	163	1,001	-838	521	224	298
2001	192	1,023	-831	543	262	281
2002	221	1,252	-1,031	700	272	427
2003	284	1,524	-1,240	925	339	586
2004	347	1,967	-1,620	1,250	447	803
2005	418	2,435	-2,016	1,629	487	1,142
2006	552	2,878	-2,326	2,035	592	1,443
2007 상반기	305	1,480	-1,175	1,072	333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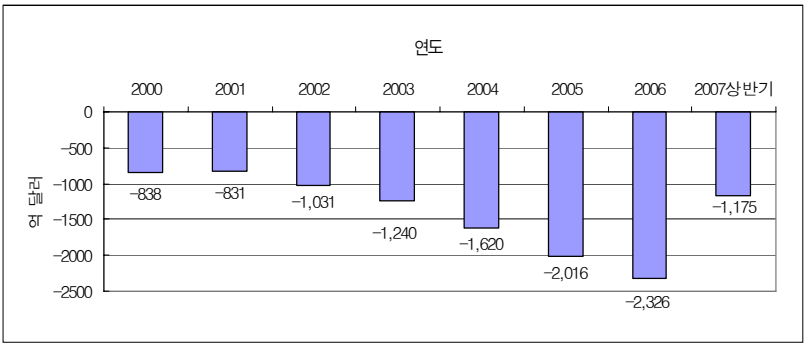
자료: 미국 National Trade Data(tse.export.gov); 중국해관(www.customs.gov.cn) 참고.

33) The US-China Business Council(2007).

34) 양국의 무역통계 차이는 상호 수출입 중에 홍콩을 경유한 상품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기인한다. 미국측은 원산지 중심으로 홍콩을 우회한 상품도 미·중 간의 무역통계에 포함하고 있고, 중국측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무역만을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구조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경제는 바로 수출대국으로서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 막대한 무역적자로 시름하고 있는 미국과는 필연적으로 통상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중국의 WTO 가입 후 연평균 25% 가까이 급증하여 2006년에 2,326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28%를 차지하였고, 2007년 상반기에는 1,175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31%를 차지하였다. 이는 미국이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과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2002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6년에 8,117.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GDP대비 6.2%까지 확대된 상태이다.

그림 2-1.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자료: 미국 National Trade Data(tse.export.gov) 참고.

하지만 미·중 간의 통상마찰이 단순 무역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양국의 무역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무역관계의 파괴가 어느 측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저가 제품에 의해 소비자 이익이 확대되고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제품 및 서비스의 대중국 수출도 미국의 전체 수출증

가율 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간의 통상마찰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적 보완성과 정치적 경쟁구조를 바탕으로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중국의 WTO 가입 후 연평균 25% 가까이 급증하였다. 2002년과 2006년 기간에 캐나다의 전체 무역수지는 573억 달러에서 513억 달러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중국 무역수지는 119억 달러에서 265억 달러로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의 입장에서 중국은 2002년 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에는 대중국 수입규모가 345억 달러에 이르러 2002년의 160억 달러에서 2배 이상 늘었으며 캐나다의 전체 수입에서 10% 가까이 차지하였다. 동시에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도 2002년 40억에서 2006년 80억 달러로 2배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2007년 들어서는 금속, 유기화학,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43% 이상 급증하여 일본과 공동으로 세 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같은 기간의 수입증가율은 17%를 기록함으로써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물론 이는 루니화의 강세에 의한 영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대중국 수입량은 수입가치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35)]

하지만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중국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인권문제로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산업스파이 및 중국제품의 안정성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상호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선 대중국

35) Canada's National Statistics Agency(2004, 2007).

무역적자 규모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대중국 수입제품이 캐나다의 실업을 유발하거나 자국 제조품과 경쟁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경제가 부상하면서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수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에 편중되어 밀과 펄프 등에 의존했던 수출구조에서 탈피하여 수출대상과 수출상품이 다변화되는 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국 수출의 비중은 2002년 84%에서 2006년 79%로 축소되었다.

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과 위엔화 환율문제

현재 대중국 무역적자의 원인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중국에게 다양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중국정부가 저평가된 환율과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제품에 대해 과장된 경쟁우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와 다양한 시장장벽을 통해 미국기업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위엔화의 평가절상과 함께 미국기업에 대한 더 많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통상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는 주로 대중국 제재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 4월 상원에서 Charles Schumer (D-NY) 의원과 Lindsey Graham(R-SC) 의원이 중국의 위엔화가 15~40%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빠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모든 중국제품에 대해 27.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슈머·그레이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처리는 2005년 7월 중국의 관리변동환율제도의 도입과 Bush 행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그리고 2006년 3월 Shumer의원의 방중 등으로 몇 차례 연기된 후 2006년 6월에 WTO 기준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철회되었다.[36)]

최근에는 Max Baucus(D-MT) 의원, Charles Grassley(R-IA) 의원, Charles Schumer(D-NY) 의원 및 Lindsey Graham(R-SC) 의원이 공동으로 '슈머·그레이엄 법안'에 이은 「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07」 법안을 새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WTO의 기준에 일치하도록 입안되었으며, 중국이 저평가된 위엔화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환율시장에 개입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원에서도 Artur Davis(D-AL) 의원과 Phil English(R-PA) 의원이 발의한 「Nonmarket Economy Trade Remedy Act of 2007」 법안의 경우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비시장경제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37] 이렇듯 민주당이 상하원 의회를 장악한 이후 미국 의회는 대중국 통상압력에 더욱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하원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미국 상부부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정치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38]

3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07).

37) US-China Business Council(2007a).

38) 미국 의회와는 달리 미국의 재무부 및 무역대표부 등 행정부는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관련 보복성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다.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전략적 경제대화(SED), 미·중 합동상무위원회(JCCT) 등 양국간의 대화 창구를 통해 적절한 타협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표 2-2. 현재 중국 위엔화 문제 관련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현황

법안번호	발의의원	법안명/법안 내용
HR.321	English(R-PA) Hayes(R-NC) Reynolds(R-NY)	Currency Harmonization Initiative Through Neutralizing Action Act of 2005: 재무부로 하여금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율조작 정도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함
S.796	Bunning(R-KY) Bayh(D-IN)외 3명	Fair Currency Act of 2007: 환율조작을 미국상계관세법의 관세부과조치 대상으로 규정함. 환율조작을 불공정 무역관행의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 및 구제조치를 제도화함
HR.782	Ryan(D-OH) Hunter(R-CA)[39]	
HR.1002	Spratt(D-SC) Myrick(R-NC)	위엔화 저평가 및 환율조작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와 협상이 실패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부여함(중국정부가 위엔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중국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7.5% 관세 부과)
HR.2942	Ryan(D-OH)	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Act of 2007: 환율조작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무화함
HR.1229	Davis(D-AL) English(R-PA)	Nonmarket Economy Trade Remedy Act of 2007: 미국 상계관세법을 비시장경제 국가에도 적용함
S.974	Collins(R-ME) Bayh(D-IN)	Stopping Overseas Subsidies Act: 미국 상계관세법을 비시장경제 국가에도 적용함
S.1607	Baucus(D-MT) Grassley(R-IA) Schumer(D-NY) Graham(R-SC)	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 of 2007: 환율조작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무화함(환율조작국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는 법안임)
S.1677	Dodd(D-CT) Shelby(R-AL)	Currency Reform and Financial Markets Access Act: 통화이탈 사실이 확인되면 환율조작국가로 지명하고 그에 대한 의무조치를 규정함

자료: US-China Business Council(2007b).

미국 의회와 달리 미국의 재무부 및 무역대표부 등 행정부는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관련 보복성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다.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전략적 경제대화(SED), 미·중 합동상무위원회(JCCT) 등 양국간의 대화 창구를 통해 적절한 타협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행정부에서는 재무부가 2005년 5월부터 매년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폭적인 위엔화 절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부시 행정부로서는 국제무역에 대한 기본 노선을 WTO를 근간으로 하는 공정한 자유무역과 FTA를 중심으로 한 쌍무협정 체결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강경조치에 대한 의회, 언론 및 업계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방식의 '조용한 외교'를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재무부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2006년 5월과 2006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추어 왔다.[40] 또한 2007년 6월에 발표된 재무부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환율정책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상의 이점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수지균형을 저지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하였다.[41]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6년 2월 새로운 대중국 통상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미·중 간 새로운 통상관계를 정립하고 중국이 국제무역체제 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대중국 통상전략의 6대 목표와 5대 핵심 이행사항을 제시하였다. 6대 목표로는 1) 국제기구 및

39) 2005년에도 Tim Ryan(D-OH) 의원 및 Duncan Hunter(R-CA) 의원이 공동 발의로 중국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China Currency Act를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법안도 현재 하원 내에서 Davis-English 법안만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WTO 기준과도 일치하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하다. US-China Business Council(2007a).

40)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환율조작의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Bergsten(2007).

41) 『서울경제신문』(2007a).

국제협정에 적극적 참여, 2) 국제통상 규범의 이행과 준수, 3) 미국 통상법 집행의 강화, 4) 무역장벽 해소 및 경제개혁, 5) 미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 6) 통상현안에 대한 사전적 발굴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5대 핵심 이행사항으로 1) 시장 접근도 제고, 2) 미국 통상법 집행의 강화, 3)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제도의 개선, 4) 미·중 간 통상현안에 대한 사전적 발굴, 5)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 진흥을 제시하였다.[42] 그 주요 내용으로 중국시장의 접근도 제고를 위해 중국이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국제 협약 및 표준화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및 위조·불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통상법의 집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환율조작 근절 등을 주문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과 상품의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통상압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가. 위엔화 환율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중국으로서는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2006년 중국의 GDP 성장기여도는 소비가 50%, 총자본형성이 42.7%, 순수출이 7.3%였다.[43] 중국의 경제성장이 소비보다는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어 이러

42) USTR(2006).

43) 한국경제포럼·KIEP(2007).

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단일국가로서는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외면할 수 없으며, 국내적으로도 과잉적인 투자 및 유동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위엔화 절상과 이자율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의 경제성장 기조가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환율과 이자율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허용하는 위엔화 평가절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이자율 상승도 경기과열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과잉 유동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무역흑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2007년 들어 이미 5차례의 금리인상과 10차례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 과잉 유동성 및 경기과열에 대한 긴축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4.5%까지 올라 1987년 이후 최고의 수치이다. 1년 만기 대출기준금리는 7.29%로 높아지고 예금기준금리는 3.87%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2007년 8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5%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중국이 물가상승 억제를 겨냥한 과감한 금리인상보다는 유동성 관리를 위한 지급준비율 인상에 더 우선적임에 따라 위엔화 절상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06년에 8,570억 달러로 미국 GDP 대비 6.5%를 초과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580억 달러로 중국 GDP의 9%를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01년에 GDP의 1.3%에 불과하던 것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점진적인 위엔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경상수지 흑자규모 최대 국가가 되었다.[44] 또한 2007년 9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조 4,33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45%나 늘었다.

44) Goldstein(2007).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세계 모든 화폐에 대한 인민폐의 평균 가치가 최소 20% 절상되어야 하며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 40% 절상되어야 한다고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위엔화의 절상은 2005년 7월의 방식으로 일시에 10~15%를 절상한 후 환율의 일간 변동폭을 확대하여 빠르게 위엔화의 가치가 상승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45] 미국시장에서 중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엔화의 명목환율을 매년 5~6%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46] 또한 미국이 향후 수년 내에 경상수지 적자를 미국 GDP 대비 3~3.5%로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47]이 15% 정도 절하되고, 중국도 위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을 15%(화폐환율은 30%) 정도 절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미국은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해외금융자본이 꾸준히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자산 가격이 증가하고 낮은 장기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IMF는 미국의 순 해외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미국 GDP 대비 26%에서 2011년에는 51%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은 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다른 상대국 화폐의 평가절상을 포함한 환율 조정이 필요하고, 세계적인 저축 및 수요의 재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2007년 2월에 개최된 글로벌 불균형의 성공적인 조정을 위한 워크숍에서 세계적인 전문가 30여 명이 내린 결론이다.[48]

45) Bergsten(2007).

46) Lardy(2007).

47) 실질환율은 교역상대국간 물가상승률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환율이다. 실효환율은 주요 교역상대국가에 대해 교역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평균한 환율이다. 실질실효환율은 실질환율과 실질환율을 복합한 환율이다. Goldstein(2007).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비하면 위엔화의 절상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미국 달러화에 대해 위엔화는 2005년에 2.5%, 2006년에 3.4%, 2007년 11월까지 5.5%로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 이후 총 11.4% 평가절상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로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8.6%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위엔화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49] 특히 실질실효환율 측면에서 보면 위엔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2002년 2월의 가치보다도 2~11% 평가 절하된 것으로 IMF 및 JP Morgan 등 기관들이 평가하고 있다.[50]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요구가 자국의 환율주권을 침해하고 급격한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은 자주적이고 점진적이며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위엔화 가치의 절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위엔화 가치의 절상은 필연적인 추이지만, 현재로서는 환율이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국 경제발전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51] 중국으로서는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러한 경제발전전략이 근본적으로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경제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2] 최근 중국정부가 성장과 분배를 강조하며 추진하는 '조화로운 사회'도 궁극적으로는 내수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의 계획대로 소비가 점차적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간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투자와 수출의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고 환율과 이자율의 운용 메커니즘도 국제무역체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48) 양두용 외(2007); Ahearne *et al.*(2007).

49) Bloomberg(2007).

50) Goldstein(2007).

51) 陈硕(2006).

52) 우이(吳儀) 경제부총리는 2006년 12월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세계최대의 발전도상국으로서 중국의 지속적 발전과 사회 안정이 세계평화발전에 가장 공헌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위엔화 절상압력에 대해 계속 단호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2005년 7월 위엔화 페그제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을 채택한 후 점진적으로 꾸준히 위엔화를 절상해 왔다.[53]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단기간 급격한 절상에는 반대하는 것이다.[54]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달러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위엔화의 절상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달러화 약세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EU 국가들도 중국 위엔화 절상요구에 동참하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55] 더욱이 국내적으로도 과잉 유동성 및 경기과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위엔화의 절상 속도가 기존보다 가속화될 것은 분명한 추세이다.

나.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한 중국의 대응과 확대되는 통상마찰

현재 중국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무역흑자를 줄여 통상마찰의 원인을 완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56]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다양한 시장장벽 등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소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미국과의 직접적인 통상마찰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57]

우선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중국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수출업체 원가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입관

53) 童银华・宋振宇・何军(2007).

54) 曹垂龙(2007).

55) 人民网(2007c).

56) 중국은 더 이상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으며 수입과 내수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후진타오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 있다. 中新网(2006).

57) 中国中央政府门户网站(2006b, 2006c).

세율 인하 및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폐지 등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이와 동시에 자본유입을 억제하고 자본유출을 촉진하여 자본수지 균형도 이루려 하고 있다.[58]

수출 억제를 위한 조치에서 특히 2007년 6월 발표된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포함된 제품은 중국 전체 품목코드(HS Code)의 37%에 달하는 2,955개 품목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그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다. 그 중에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품목은 687개, 인하 품목을 2,268개, 면세전환 품목을 11개이다. 환급률 취소제품은 주로 저부가가치, 고에너지, 고오염 및 고자원성 제품이며, 환급률 인하제품은 부가가치가 낮은 중간재와 경공업제품으로 제품별로 5%, 9%, 11%로 환급률이 하향 조정되었다.[59] 이는 중국이 무역흑자를 줄여나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종 산업정책을 통하여 저부가가치 자원 소모형 산업을 도태시키고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또 한편으로 중국은 고에너지, 고오염 및 고자원성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에너지, 자원류, 핵심부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의 선별적 허용, 자원 소모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아울러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 내 외자은행 및 외자기업의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외화의 유출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신시장 개척, 신기술 도입, 자원개발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용 외화매입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적격내국인기관투자가(QDII)를 통한 해외증권투자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60]

58) 经济论坛(2007).

59)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기존까지 17%(100% 환급), 13%, 11%, 8%, 5%로 구분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17%, 13%, 11%, 9%, 5%의 5등급으로 조정되었다. KOTRA(2007).

60) 박승록(2007).

표 2-3. 통상마찰 및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한 중국의 조치

구분	주요 조치	주요 내용
수출 억제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 255개 품목 환급취소, 1,130개 품목 환급률 인하, 191개 품목 환급률 상향조정 등 총 1,385 품목에 대해 환급률 조정(2006년 9월) - 83개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 및 76개 철강제품 증치세 환급률 추가 인하(8%→5%)(2007년 4월) - 총 2,955개 품목에 대해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 취소 또는 수출 증치세 면제로 변경(2007년 6월)
	수출관세 부과	- 110개 자원 및 에너지 관련 수출품 등에 대해 최소 5%에서 최대 15% 수출관세 부과(2006년 11월) - 142개 세목으로 확대하여 수출관세를 최대 15%로 조정(2007년 6월)
	가공무역 금지	- 자원소모 및 환경관련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을 추가 금지하여 총 금지 품목은 1,263개로 확대됨(2006년 11월) - 노동집약형 산업제품 등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1,853개 품목으로 확대(2007년 8월)
수입 확대	수입관세율 인하	- 신기술 관련 부품(1~7%→0~3%), 석탄·정제유(3~6%→0~3%), 화학비료(3~5.5%→1%) 등 58개 고기술 및 자원 관의 수입품 관세 인하(2006년 11월)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폐지	- 철강재, 수지원료, 일부 기계설비 등 338개 수입항목에 대한 허가증 관리제도 폐지(2007년 4월)
자본 유입 억제	FDI 선별 강화	-「외자이용 11.5 계획」발표(2006년 11월) - 자원소모적 투자 및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한 FDI 유입 억제
	투기성자금 유입 통제	- 중국내 외자은행 및 기업의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 강화 -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조건 강화 및 부동산 관련 외화유출입 감독 강화(2006년 7월)
	단기외채 관리 강화	- 2008년 3월 말까지 단기외채잔액을 국내은행은 2006년도 심사기준액의 30% 이내로, 외자은행은 60% 이내로 축소토록 조치(2007년 3월)
자본 유출 확대	해외투자 장려	- 기업의 해외투자 한도(기존 50억 달러)를 폐지(2006년 7월) - 적격내국인기관투자가(QDII)를 통한 해외증권투자 허용 확대 -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민간의 외화보유 확대	- 개인의 외화거래 한도 확대(2만 달러→5만 달러)(2007년 2월) - 기업의 외화보유 한도를 전년도 외환수입의 80%와 전년도 총 외화 지출의 50%의 합계액으로 확대
	대외원조 확대	- 아프리카 국가 등에 3년간 30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 제공 - 50억 달러의 아프리카 발전기금 출연

자료: 한국은행(2007a).

이러한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흑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2006년 1,775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41% 늘어난 2,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61] 이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상계관세 부과, WTO 제소 등의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2004~06년 동안 세계시장에서 받은 반덤핑 피소는 174건에 이른다. 한편 중국측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수출보조금, 반덤핑 등 700여 건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수출기업의 70%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62] 또한 2007년에 들어서 7월까지만 해도 16개 국가로부터 32건에 달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를 받고 있다. 해당 피소제품의 수출액만 12억 달러에 달하고, 32건 중에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의 피소가 60%를 차지하고 있다.[63] 특히 미국은 2007년 7월까지 경우 중국에 8건의 반덤핑 제소를 추가하였으며, 현재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도 62건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피소 품목을 보면 생활용품(양초, 제지 등), 화학과 제약, 철강류에 대한 규제가 많으며 이 밖에 농림, 식품류, 광물 금속 등 다양한 품목에서 규제조치가 부과중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07년 8월까지 6회에 걸쳐 대중국 세이프가드(통상법 421조)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그 중 4건에 대해서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64]

수출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 상무부는 법원의 1986년

61) 『이데일리』(2007).

62) 王晓慧(2007), 沈国兵(2007).

63) WTO 통계에 따르면 1995년~2006년 상반기까지 미국이 중국에 피소한 반덤핑 건수는 61건에 이르며 전체 중국의 판덤핑 피소 건수의 12.2%를 차지하였다. 刘力(2006).

64) KOTRA(2007).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판결 이후 비시장경제국가 기업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최근 이 같은 입장을 변경하고 중국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2007년 3월에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첫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고 5월에 23.19~99.6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은 2007년 들어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의회 등이 일제히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과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도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관행에 대한 보조금 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2007년 2월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처음으로 WTO에 제소하기도 하였다. 2007 보조금 보고서(2007 Subsidies Enforcement Report)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2006년 4월 WTO 보조금 위원회에 70여 개에 이르는 보조금을 통지하였으나, 보고서의 조사 결과 통고하지 않은 보조금이 발견되었으며 금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게 WTO에 통고한 보조금과 통고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조치는 일정한 수출실적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법인소득세 감축 및 환급,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우대대출금리 적용, 사회보장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중국산 설비 및 부품을 구매한 기업에게 주는 법인소득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 혜택도 포함된다.[65][66]

65) 나수엽・지만수(2007).

66) 刘力(2006).

표 2-4. 미국의 대중국 WTO 제소 현황

제소 일자	제소 내용
2007.4.10	중국의 저작권, 상표권 보호 법률 및 이를 강제하기 위한 규범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소
2007.4.10	교역권한 및 유통서비스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충분한 시장접근 기회 미제공
2007.2.10	철강, 목재, 제지 등 중국 내 다양한 산업에 대해 WTO 규정에 위배되는 수출입 보조금(세제 혜택, 관세면제, 대출 특혜 등)을 지급함으로써 교역왜곡과 수입품 차별 유도
2006.3.30	국내제조업체들의 수입 자동차 부품 사용 억제 및 해외기업의 생산시설 중국 이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자동차 부품을 차별하는 규정 도입
2004.3.18	수입 반도체에 대한 부당세제를 문제 삼아 WTO에 제소.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설계, 제조된 반도체 칩은 17%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내 생산업체에게는 세금 환급 제공(수출증치세 환급)

자료: KOTRA(2007b).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경우도 2007년 상반기까지 5차례 발생하였다. 그 중 2건은 지식재산권 침해이고 1건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5년에 특별 301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분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법제도의 보완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력과 요구에 대해 중국은 '강온양면의 대응전략'으로 상대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강하게 맞대응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양보 및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제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향상, 그리고 기술력 제고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06년 5월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한 데 대해 중국도 WTO에 제소하였다.[67]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2002년 EU와 함께 철강무역 마찰 중재를 요구한 후 두 번째이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WTO에 단독 제소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중국은 WTO에 제소된 미국과의 통상마찰에서 미국에 양보하며 비교적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2004년 반도체 분쟁은 양국간의 WTO 협의 결과를 거쳐 중국측의 양보로 타결되었으며, 2006년 자동차부품 수입관세 분쟁은 WTO 패널이 설치되었다. 또한 2006년 1월 골판지 원지 반덤핑 분쟁은 WTO에 제소할 것이라는 미국 측의 통고에 중국의 양보로 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의 경우 반덤핑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환경을 구성하는 중국의 금융, 토지, 세제 등 경제시스템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문제의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가 중국의 국유기업에 대한 금융이나 재정 등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보조금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68] 그리고 실제로 2007년 11월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고 중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중국도 연말부터 WTO 규정에 따라 수출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69]

67) 人民网((2007a, 2007b), 中国中央政府门户网站(2007a).

68) 나수엽・지만수(2007).

69) 『이데일리』(2007e).

4.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중국의 전략

가. 미·중 간의 제17차 JCCT 및 제2차 SED의 합의내용과 성과

미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양국의 경제 관계가 상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무역관계의 파괴가 어느 측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다양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미·중 간의 경제 및 무역 관련 이슈를 다루는 양국간 주요 고위급 대화 창구는 미국 재무부와 중국 재정부 간 합동경제위원회(US-China Joint Economic Committee), 미국 국무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경제개발개혁대화(US-China State NDRC Dialogue) 등이 있다. 또한 과학기술, 에너지정책, 글로벌 이슈, 보건위생 및 환경문제 등 분야에서도 고위급 양자간 대화 창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 중에 미·중 합동상무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는 1983년에 양국간의 무역 확대를 위해 미국 상무부와 중국 대외경제무역부(현재 상무부의 전신)가 설치한 양국간 고위급 대화 창구이다. 그 후 양국의 통상관계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1994년부터 양국 정부는 의류, 농업,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통계, 관광, 상업법 등 10개 분야의 실무조직을 설치하여 제도적으로 합동상무위원회를 강화하였다. 2003년부터는 미국 부시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합의에 의해 합동상무위원회의 양국 대표로 미국은 상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를 임명하고 중국은 무역 관련 부총리를 임명하기로 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최되었던 제17차 미·중 합동상무위원회는 2006년 4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은 Carlos Gutierrez 장관과 Robert Portman 대표가, 중국은 우이(吳儀) 부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하였다.[70] 주로

중국시장 접근도 제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한 협상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대폭 수용하였다. 특히 정부조달시장, 통신시장, 특송서비스 등 시장개방을 위한 무역장벽 해소를 약속하였다. 또한 불법 CD/DVD 단속 강화 및 정품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대미국 무역흑자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대동하여 방미기간 중 보잉사의 항공기 80대를 포함해 통신, 기계설비 등 약 162억 달러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71]

제18차 미·중 합동상무위원회는 2007년 12월 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07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은퇴할 것으로 알려진 우이 부총리가 마지막 중국측 대표로 나올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제17차 JCCT 직후 새로 임명된 Susan Schwab이다.

미·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는 2006년 8월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합의에 의해 시작되었다. 매년 정례적으로 두 차례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미·중 최고위급 경제 각료들이 대거 참여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양국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시장경제에 의한 거시운영, 국제무역체제에 부합하는 대외개방 등 중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틀에서 상호입장을 논의하자는 공감대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양국관계의 중대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로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경제대화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다양한 대화 창구의 수준을 뛰어 넘어 양국의 통

70) 中国中央政府门户网站(2006a)

71) 新浪财经网(2006).

상현안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방향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평가되고 있다.

표 2-5. 제17차 미·중 JCCT 주요 합의 내용

영역	합의 사항	주요 내용
시장 접근도 제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03년 12월부터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조건부 수입 재개, 전문가 평가 실시
	의료기구	수입 의료기구에 대한 중복적인 검사 및 자격증을 제거
	통신시장 접근도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자본금 조건 개선, JCCT 통신서비스 대화기구 설치
	3세대 이동통신 표준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3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특송서비스	우편법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이 외국기업의 특송서비스 환경에 악영향 없을 것임을 재확인
	정부조달시장 개방	정부조달시장 개방 및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위해 공식협상을 진행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불법 복제 CD/DVD	영화, 음악 및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4개 불법 CD/DVD 공장 폐쇄)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	중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컴퓨터에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
	정부 및 기업의 합법적 소프트웨어	정부 및 기업에서 사용되는 컴퓨터에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
	실행 계획	입법 및 교육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
법의 지배 및 관리제도 개선	투명성 제고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문제, 외환관리 등과 관련한 모든 법제도의 정비 및 각급 정부기관의 조치에 대해 단일 정부 간행물에 정기적으로 발표
	수출제한정책	첨단기술 및 전략무역 실무조직을 설치하여 수출제한정책의 협력과 첨단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 진행

자료: US Department Commerce(2006).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2006년 12월 14~15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발전경로와 중국의 경제개발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미국측은 Henry Paulson 재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Glenn Hubbard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Carlos Gutierrez 상무장관, Mike Leavitt 보건장관, Samuel Bodman 에너지장관, Elaine Chao 노동부장관, Mike Johanns 농무장관, Mary Peters 교통장관, Susan Schwab 무역대표부 대표, Stephen Johnson 환경보호국장, Ben Bernanke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등 장관급 8명을 포함한 50여 명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중국측은 우이(吳儀)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마카이(馬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쑨정차이(孫政才) 농업부장, 가오창(高强) 위생부장, 왕쉬둥(王旭東) 정보산업부장, 쉬사오스(徐紹史) 국토자원부장, 완강(万鋼) 과학기술부장 등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70여 명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가하였다.[72]

미국은 주로 위엔화의 유연성 확대, 지속성장과 대외불균형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법의 지배 정착, 무역장벽 해소, 경쟁시장 도입, 국내외 무역 확대, WTO 제도 준수, 환경보호 및 에너지안보 등을 위해 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거대인구를 가지고 있는 발전도상국으로서 중국경제의 특수성과 중국이 당면한 국내 경제적 과제를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와 존중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회담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양국의 균형적인 성장 및 번영을 위해 거시정책 운영에서 중국은 환율체제 개혁을 추구하고 미국은 국민저축을 늘리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73]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2007년 5월 22~23일 워싱턴에서 '혁신과 교육, 그리고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1차 대

72) 최원기(2007).

73) US Department of Treasury(2006).

화에서는 양국이 구체적인 통상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보다 양국 경제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면, 제2차 대회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하고 좀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협상의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였다. 특히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합의내용이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고, 투자 및 무역의 확대, 서비스 및 보건 분야의 개방논의, 환경보호, 에너지안보 등 분야별로 도출된 내용도 선언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미국 의회 및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의 Max Baucus(D-MT) 의원 및 Chuck Grassley(R-IA.) 의원 등은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개회되기 직전에 중국의 우이(吳儀) 경제부총리에게 서안을 보내 위엔화 절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WTO 제도 준수, 서비스시장의 과세 및 비관세장벽 해소, 미국 농산품 수입 제한조치 철폐 등 주요 무역 및 경제 현안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였다. 또한 뒤이어 미국 하원의 Ways and Means 위원회에서도 우이(吳儀) 경제부총리에게 서안을 보내 중국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수출보조금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의지 부족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74]

이에 따라 중국과 대화를 통한 장기적인 해결을 주장해온 미국측 수석대표인 Henry Paulson 재무장관으로서도 제1차 대화 이후에 위엔화의 일간 변동폭이 계속해서 0.3%에 머물고 무역불균형 문제도 개선 기미가 없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Henry Paulson 장관은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단기적인 성과는 장거리에서 찍은 스냅사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제2차 대화 전에 중국이 위엔화 절상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중국이 가시적인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 의회가 발의 중인 제재 법안에 대해 행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75]

74) Glaser(2007).

표 2-6. 제2차 미·중 SED 주요 합의 내용

영역	합의 사항	주요 내용
시장 접근도 제고	양국간 항공운송 확대	- 양국간의 여객기 운항을 2012년까지 2배로 확대 (현재의 하루 10회에 23회로 확대) - 미국 화물기의 중국시장 운항에 적용되는 모든 중국정부의 제한을 2011년까지 철폐
	미국행 중국인 여행단체의 수속 간소화	- 중국인 여행단체의 미국 여행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해 협상 시작
	대중국 수출확대 지원	- 양국의 수출입은행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자본재 항목에 융자보증을 제공 - 미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 확대 지원
금융시장 개방	중국 증권시장 개방 확대	- 2007년 말까지 신규 외국증권회사 설립 관련 심사 및 허가 업무를 재개 - 제3차 SED 전까지 중개거래와 자산관리 등으로 외국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A주 투자한도를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2007년 12월부터 시행됨)
	외국은행의 위엔화 업무 확대	- 외국은행의 위엔화 업무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즉시 확대
	중국 보험시장 개방 확대	- 중국에 설립한 분점을 자회사로 전화기 위해 1년 전에 신청한 외국보험회사에게 심사결과 발표 - 향후 동일한 신청 및 허가 기간 60일 내 처리 - 제3차 SED 전까지 외국보험회사의 기업연금 업무 신청 및 심사허가 간소화
에너지 및 환경	석탄·메탄가스 공동 개발	- 미·중 합작으로 15개 대형 석탄·메탄가스 개발
	청정 석탄기술 개발	- 양국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선진 석탄기술의 상용화 촉진
	환경 관련 무역장벽 해소	- 환경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법의 지배	투명성 제고 및 지식재산권 보호	- 법의 지배에 의한 투명성 제고 강조 -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집행 강화 - 불법 복제제품 단속 및 압수 관련 정보 공유 - 불법 복제제품에 대한 세관검사 정보 공유

자료: US Department of Treasury(2007).

75) Glaser(2007).

이에 따라 중국은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좀더 유연한 협상 자세를 나타냈다. 우선 금융시장 분야에서 증권시장 개방 확대, 외국은행의 위엔화 업무 확대, 중국 보험시장 개방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시장접근도 분야에서는 양국간의 항공운송 확대 및 미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 확대 등을 합의하였다. 그 외 에너지 및 환경 분야와 투명성 제고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중국은 위엔화 절상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예상하고 사전에 압력을 완화시키고자 제2차 대화 개시 직전인 5월 18일에 환율의 일간 변동폭을 0.3%에서 0.5%로 확대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였다.[76] 한편 마시우홍(馬秀紅)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제2차 대화에 맞춰 중국 208개 기업을 대표하는 구매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의 25개 도시를 방문하여 326억 달러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77]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위엔화 절상과 무역불균형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25%에서 51%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좌절되었다. 그 외 미국은 중국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 검사 강화를 요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주문했지만, 중국은 국내 상황과 상호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이 부총리는 제2차 대화의 연설에서 경제이슈를 정치화하는 것은 양국의 통상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전반적인 양국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78] 중국은 결국 제2차 대화에서도 중국경제의 특수성과 중국이 당면한 국내 경제적 과제에 대해 미국의 이해와 존중을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합리적인 미국의 요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76) 『매일경제』(2007a).

77) 中国日报网(2007c).

78) Glaser(2007).

보였다. 중국이 제2차 대화가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자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79]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 의회가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였다. 중국이 환율정책 변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같은 미국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enry Paulson 재무장관은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정이고, 진정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이해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중국 증권시장 개방 확대 등 제2차 대화에서 얻어진 구체적인 성과들은 향후의 더 큰 진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0]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유연한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손상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좋은 경찰(Good Cop)'이 되고, 미국 의회는 '나쁜 경찰(Bad Cop)'로 이분화되어 중국에 대해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81]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제18차 미·중 합동상무위원회 직후인 2007년 12월 12~13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로 자유무역, 균형발전, 에너지보존, 금융개혁, 환경보호 및 양국간의 투자 확대 등 의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82]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시작하였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Henry Paulson 재무장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이다. 따라서 제3차 대화는 Bush 행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대화와 타협을 통한 중국과의 '조용한 외교'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 포용되고 좋은 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지 가늠할 계기가 될

79) 中国日报网(2007b).

80) Paulson(2007).

81) Bergsten(2007).

82) 中国中央政府门户网站(2007b), 人民网(2007d).

것이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이(吳儀) 부총리가 은퇴하는 마당에서 제3차 대화 이후의 리더십 변화를 염두하고, 부시 대통령 이후의 정권에서도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현재와 같이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대응의 수위를 조절할 것이다.

나.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와 능동적인 통상전략

그동안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고 무역구제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제무역체제 내에서 통상마찰에 대한 방어와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7년 12월 현재 중국은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및 10개 아세안 국가 등 총 76개 국가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최근 2007년 12월 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일·중 경제고위급대화에서 일본에게 시장경제지위를 조속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83]

중국의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법령은 1994년 대외무역법(대外貿易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이나 규칙의 미비로 무역구제조치가 실시되지 못하다가 1997년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1년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반덤핑 조례', '보장조치(세이프가드) 조례', '반보조금 조례'를 각각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법령들은 외국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할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평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WTO 규정에 부합되도록 법령들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무역구제조치 내용도 보호주의 색채가 강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장조치 조례'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예비판정 후에

83) 일·중 경제고위급대화는 2007년 4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아베신조 총리가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쩡페이옌(曾培炎) 국무원 부총리와 코무라 마사히코 외상이 제1차 대화의 양국 수서대표로 참석하여 "협력의 공동승리와 협조적 발전"이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人民网(2007e).

최종결정을 내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예비판정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세이프가드 실시기한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반덤핑 조례'의 경우 반덤핑 관세의 소급적용을 강화하였다.[84] 중국은 2006년까지 21개 국가에 대해 91개 반덤핑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주로 화공을 중심으로 제지 및 섬유 등의 제품에 집중되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1년에 한 차례 발동하여 2003년에 해제된 바 있다.[85]

한편으로 중국은 중국제품이 외국의 무역장벽에 의해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2년 11월에 제정한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대外貿易壁壘調査規則)」을 개정하여 200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역장벽조사제도는 중국이 대외무역에 있어서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무역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즉,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해결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외무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86]

최근에는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전략도 그 위상에 맞게 다변화되고 그 영향력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통상마찰에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통상전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1조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중에 60~70%를 미국 달러화 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로화 및 기타 통화에 투자하고 있다. 청쓰웨이(成思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부주석에 따르면 현재

84) 탁세령(2004).

85) US Department of Commerce(2007).

86) 『수은경제』(2005).

중국은 적정 외환보유고를 6,500억 달러(3개월 간의 수입대금 지급액 4,500억 달러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지원금 2,000억 달러)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는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87] 특히 최근 미국 달러화의 약세를 이유로 외환보유고의 다변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샤빈(夏斌)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장은 2007년 8월 8일 영국 *T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미국과 대화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88] 또한 청쓰웨이(成思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부주석은 2007년 11월 7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고 민간 및 기업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9]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는 2007년 11월 19일 ASEAN+3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최근 달러화의 약세로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90]

이와 동시에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중국자본의 해외진출 통로를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이러한 '능동적인 통상전략'은 기존의 환율정책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과잉 문제 등 대외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지만 통상현안에 있어서도 공세적인 방어라는 이중효과를 노리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국부펀드의 세계 금융권 공략, 개인의 해외투자 허용 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감한 것은 미·중 간의 무역불균형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자본의 구매력 및 영향력만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87) 中国日报网(2007a).
88) 『매일경제』(2007c).
89) 新华网(2007).
90) *Financial Times*(2007).

외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를 안보상의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Exon-Florio 법」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91]

우선 중국정부는 2000년 이후 해외투자의 규제 및 절차 간소화, 신용대출 우대금리 적용, 해외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사례는 2002년 이전에 20여 개 이하였던 건수가 2003년 67건, 2004년 129건, 2005년 77건, 2006년 8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수금액도 2004년 55억 달러, 2005년 122.6억 달러, 2006년 161.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92] 그 대표적인 인수사례는 레노보(Lenove)의 IBM PC사업부 인수, TCL의 톰슨사(Thomson)의 TV사업부 인수, 상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여 최초로 미국 현지의 은행을 직접 인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중국민생은행(中國民生銀行)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미국 UCBH의 지분 9.9%를 약 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93]

그 외에도 중국은 2006년 4월 적격내국인기관투자가(QDII) 제도를 시행한 후 2007년 5월에 그 투자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한 바 있다. 적격내국인기관투자가(QDII)는 일정 조건을 갖춘 은행·보험회사·펀드회사가 국내기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해 해외채권 등 고정수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2007년 5월에 그 투자대상이 해외주식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중국의 20개 보험회사가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격내국인기관투자가(QDII) 인가를 취득하였고, 적격내국인기관투자가(QDII)들에게 허용된 투자쿼터도 2007년 9월 말 기준 422억 달러로 그 중 109억 달러가 이미 해외시장에 투자되었다.[94]

91) Peterson Institute for Int'l Economics(2006).

92) 박승록(2007); 양평섭·이인구(2007).

93) 『매일경제』(2007b).

▌표 2-7. 최근 중국의 해외금융회사 인수 사례▐

인수기업	피인수 금융회사			금액 (억 달러)	일시
	업종	기업명	국가		
건설은행	은행	BOA 아시아법인	미국	12.0	06년 08월
공상은행	은행	Halim은행	인도네시아	0.1	06년 12월
중국은행	리스사	싱가포르항공리스	싱가포르	9.7	06년 12월
국부펀드	사모펀드	블랙스톤	미국	30.0	07년 05월
국가개발은행	은행	바클레이	영국	135.0	07년 07월
공상은행	은행	성흥은행	마카오	5.9	07년 08월
민생은행	은행	UCBH은행	미국	2.0	07년 10월

자료: 국제금융센터(2007).

또한 중국은 2007년 9월에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조성할 계획으로 외환투자 전문기관인 중국외환투자공사(中國有限投資責賃公社, CIC)를 설립하였다. 중국외환투자공사는 주식, 채권, 사모펀드 등 해외금융자산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영향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국내적으로는 과잉 유동성 축소, 위엔화 절상 압력 및 외환보유고의 손실발생 리스크 완화,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외환투자공사는 이미 2007년 5월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계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Blackstone)의 지분 10%를 인수하였다.[95] 동년 7월에는 중국개발은행이 영국계 은행인 바클레이(Barclays)의 지분 6.7%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94) 『이데일리』(2007b, 2007d).

95) 한국은행(2007b).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인 세계 금융권 공략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국부펀드의 투명성과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96]

향후 중국은 톈진(天津) 빈하이신구(濱海新區)를 시범지구로 삼아 개인이 해외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첫 번째 투자 허용대상지로 홍콩 증시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개인이 중국은행 톈진지점에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연간 5만 달러 이내 범위에서 홍콩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자본시장 자유화 폭을 크게 넓히고 과잉 외환보유고의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97] '주식 직통열차 계획'이라고도 불리는 홍콩 증시 직접투자 계획은 2007년 8월 20일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발표하였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세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후 계획이 잠정 보류된 상태이다. 하지만 일단 계획이 시행되면 투자 수단이 톈진시와 중국은행 한 곳으로 제한되지 않고 여러 은행 및 도시를 통해서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8]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미·중 간의 통상마찰은 향후에도 지속되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위엔화 평가절상은 중국경제의 국내사정에 맞춰 점진적인 변화 방침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중국 내에서 과다한 외환보유액, 과잉 유동성 및 경기과열 등의

96) 『머니투데이』(2007).
97) 『서울경제신문』(2007b).
98) 『이데일리』(2007c).

문제가 더욱 악화되면 중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현재 위엔화 환율정책은 중국 정치권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나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前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은 "위엔화의 절상속도 둔화가 중국의 유동성 과잉의 주 요인이며 지준율 인상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99] 이러한 상황에서 위엔화의 절상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Goldman Sachs 등 해외기관들은 2008년 위엔화의 절상률이 대체로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달러 약세로 한국의 원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엔화의 환율변동폭의 확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병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엔화가 절상되면 한국의 경우 위엔화 가치의 상승에 따른 가격효과 및 소득효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중국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중국 현지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통신·컴퓨터 등 국내 수출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제3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미·중 간의 통상마찰은 우리에게 환율 리스크 측면보다 국제무역체제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에 더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향후 중국의 수출시장은 다변화되고 수입대국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사안별로 서로 다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수출 보조금 및 지식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이해 관계자'로서 양

99) 한국은행(2007a).

보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흑자를 축소하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내의 경영환경 및 수출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기술력 및 품질의 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첨단 산업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다. 하지만 반덤핑 제소, 상계관세 부과, WTO 제소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맞대응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특히 시장개방의 요구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인 원칙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기업의 중국시장 접근도에 상응하는 중국자본의 미국시장 접근도를 요구할 수 있고, 향후 미·중 간의 통상마찰에서 가장 첨예한 이해가 발생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현재 한·중 간에도 통상마찰이 확대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까지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능동적인 통상전략'이 더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시장경제지위 요구도 관철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의 한국기업 인수에 있어서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한국시장 환경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미·중 간의 통상마찰이 한·중 FTA 협상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시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대중국 투자의 자유화와 시장접근의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금융 및 서비스분야는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분야이다. 이 분야의 중국진출은 향후 한·중 관계의 향방을 좌우할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을 한·중 FTA 협상에서 먼저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미국에게 허용하는 수준에서 좀더 우호적인 입지를 얻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도를 제고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한·중 FTA 협상에서 능동적으로 협상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문 자료

나수엽 · 지만수. 2007.「미·중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쟁의 배경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2007년 상반기 중국경제 평가 및 정책 방향」. 한중경제포럼. (8월)

매일경제. 2007a.「중국은 미국을 놀리고 있다」. (5월 20일)

_____. 2007b.「中민생은행, 美은행 지분 첫 매입」. (10월 9일)

_____. 2007c.「中 달러자산 매각은 핵폭탄」. (8월 9일)

머니투데이. 2007.「중국, 美 주요 금융사 인수 본격화」. (10월 23일)

박승록. 2007.「중국의 세계기업 인수합병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10월)

서울경제신문. 2007b.「中, 개인 해외주식투자 허용」. (8월 21일)

_____. 2007a.「美, 중국 환율조작 없었다」. (6월 14일)

양두용 외. 2007.「글로벌 불균형: Time for Action」.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월)

양평섭 · 이인구. 2007.「외환보유 1조 달러 시대의 중국 외환관리정책 전망과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월)

이데일리. 2007a.「中 올해 무역흑자 2500억 달러 예상」. (10월 29일)

_____. 2007b.「中 해외투자 여력 422억 달러, 109억 달러 집행」. (11월 5일)

_____. 2007c.「中, 홍콩 개인직접투자 확대 시행 검토중」. (11월 29일)

_____. 2007d.「中, 20개 보험사 해외투자 인가, 홍콩 수혜 전망」. (11월 30일)

_____. 2007e.「中 수출보조금 철폐 합의, 美中 무역긴장 완화」. (11월 30일)

이치훈 · 이정진. 2007.「중국 최초의 미국은행 지분참여 의미와 전망」. 국제금융센터. (10월)

최원기. 2007.「미국의 대중 경제통상전략의 새로운 변화: 제1차 전략경제대화(SED)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4월)

탁세령. 2004.「반덤핑 조례 등의 주요 개정내용과 전망」.『수은해외경제』. (6월)

_____. 2005.「중국 자국 기업의 무역활동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조사규칙 제정」.『수은경제』. (4월)

한광수. 2006.「위안화 환율변동과 미 · 중 통상 관계: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변화를 중심으로」.『현대중국연구』, 제8집 1호.

한국은행. 2007a.「최근의 중국경제 상황과 위안화 절상 논란」.『해외경제정보』. 한국은행. (5월 3일)

_____. 2007b.「중국 외환투자공사(CIC) 설립 배경과 영향」.『해외경제정보』. (11월)

한석희. 2004.「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변화: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화평발전전략을 중심으로」.『신아세아』, 제11권 3호(가을호), pp. 113~134.

KOTRA. 2007a.「중국 증치세 환급률 인하의 영향과 전망」.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7월)

_____. 2007b.「선진국-중국 무역마찰, 그 영향과 대응」.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9월)

●●외국문 자료

[중문 자료]

贾庆国. 2005.「美国外交思想与实践」.『同济大学学报』, 第2期, pp. 62-69.

郭益耀 · 郑伟民主编. 2001.『经济全球化与中美经贸关系』.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童银华 · 宋振宇 · 何军. 2007.「人民币升值过程中我国对外贸易面临的挑战、机遇和对策」.『现代科学管理』. 第2期.

柳剑平 · 郑绪涛. 2005.「中美贸易摩擦的未来趋势及我国应采取的对策」.『湖北大学学报』, pp. 417-420. (4月)

马加力 · 崔燕生. 1994.「当代国际关系的基本准则: 纪念和平共处五项原则提出40周年」.『现代国际关系』, 第6期, pp. 2-5.

徐坚. 2004.「和平崛起是中国的战略抉择」.『国际问题研究』, 第2期, pp. 1-8, 70.

肖枫. 2006.「从'和平外交'到'和谐外交'」.『当代世界』, 第8期, pp. 7-9.

孙晋忠. 2006.「试论布什政府的全球'民主'战略」.『国际问题研究』, 第1期, pp. 28-32.

宋国友. 2004.「相对收益, 绝代收益和中美政治与经济关系发展悖论」.『世界经济研究』, 9期, pp. 8-14.

新浪财经网. 2006.「签署107分合同, 中美达成逾162亿美元采购大单」. http://www.sina.com.cn. (4月 13日)

沈国兵. 2007.「反倾销等贸易壁垒于中美双边贸易问题」.『财经研究』.(1月)

倪建民 · 陈子舜. 2003.『中国国际战略』. 北京: 人民出版社.

岳晋峰. 2005.「中美贸易摩擦背後的根源探析」.『对外经贸实务』, 第7期, pp. 39-41.

阎学通. 2002.「加大的政治影响力:非同步的中美政治与经济关系」.『国际贸易』, 第12期,

王晓慧. 2007.「"双反"调查给中美贸易带来危机」.『新财经』.(10月)

熊洁敏. 2007.「人民币升值对中美贸易的影响及对策」.『经济论坛』, 第14期.

刘力. 2006.「中美之间的贸易摩擦」.『学习时报』.(3月 26日)

人民网. 2007a.「美认定我企业贷款均有'补贴', 中方不满将诉诸WTO」(10月 22日)

_____. 2007b.「铜版纸之争, 美国有硬伤」. (10月 23日)

_____. 2007c.「美日欧联手敦促人民币升值」. (12月 7日)

_____. 2007d.「议题拓展-中美战略经济对话下周举行」. http://www.people.com.cn (12月 7日)

林宏宇. 2006.「2006年美国国家安保战略报告解析」.『国际关系学院报』, 第3期, pp. 23-26.

张奇 · 王元龙. 2005.「中美双边贸易: 兼容性与非兼容性及其走向」.『国际金融研究』, 第8期, pp. 45-52.

张璐. 2005.「中美贸易摩擦手段新动向及特点」.『对外经贸实务』, 第9期, pp. 34-36.

曹垂龙. 2007.「论人民币升值对中美贸易失衡的改善效应」.『贵州社会科学』. (1月)

周林. 2006.「中美经贸摩擦分析」.『外交评论(外交学院学报)』, pp. 88-92. (2月)

제16차/제17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工作报告』.

朱颖. 2005.「试论美国对华贸易政策的歧视性」.『世界经济与政治论坛』, 第4期, pp. 43-50.

中国中央政府门户网站. 2006a.「吴仪与美国商务部长等主持第17届中美商贸联委会」. (4月 12日)

_____. 2006b.「知识产权局局长田力普: 保护知识产权是我国的基本国策」. (4月 25日)

_____. 2006c.「2006年中国保护知识产权行动计划(全文) 及说明」. (5月 25日)

_____. 2007a.「我就美国铜版纸反倾销措施启动 WTO 争端解决程序」. (9月 14日)

_____. 2007b.「深入对话, 加强合作-财政部部长谢旭人第三次中美战略经济对话前夕接受媒体采访」. http://www.gov.cn (12月 9日)

中新网. 2006.「胡锦涛谈中美贸易问题, 中国不追求大额外贸顺差」. http://www.chinanews.com.cn. (4月 20日)

陈硕. 2006.「从长期来看, 人民币汇率上升是必然的趋势, 但目前维持汇率的稳定更有利于经济的发展」.「人民币汇率超常稳定与外汇储备超常增长的困境」.『统计与决策』. (2月, 下)

[영문 자료]

Ahearne, Alan *et al*. 2007. “Global Imbalances: Time for Action.” *Policy Brief*. Peterson Institute for Int'l Economics. (March)

Bergsten, Fred. 2007a. “Currency Misalignments and the US Economy.”

Testimony befor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eterson Institute for Int'l Economics. (May)

_____. 2007b. “The Dollar and the Renminbi.” Statement before the US Senate Hearing, Peterson Institute for Int'l Economics. (May 23)

Bloomberg. 2007. “China Trade Surplus Probably Held Near Record, Fueling Tension.” (December 9)

Canada's National Statistics Agency. 2004. “Canada's Trade with China.” *Statistics Canada*. (June)

_____. 2007. “Trading with a Giant: An Update on Canada-China Trade.” *Statistics Canada*. (November)

CBS News. 2006. “Won't ‘sell out’ on Rights Despite China Snub: PM.” (November 1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7. “US-China Relations: An Affirmative Agenda, A Responsible Course.” (April)

Financial Times. 2007. “China Voices Alarm at Dollar Weakness.” (November 19)

Glaser, Bonnie. 2007. “US-China Relations: Two Bilateral Dialogue Mechanisms Manage Friction.” *Comparative Connections*. (July)

Goldstein, Morris. 2007. “A Lack of Progress Report on China's Exchange Rate Policies.” Working Paper Series 07-5. Peterson Institute for Int'l Economics. (June)

Gowa, Joanne. 1989.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Free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pp. 1245-1255. (December)

GTI(Global Trade International Services, Inc.) 2007. *World Trade Atlas 2007*.

Huikang, Huang. 2006. “Let's Witness a Bright Future of China-Canada Relations,” Speech by Dr. Huang Huikang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ne Country, Two Systems.” Waterloo, Canada on March 24. http://www.chinaembassycanada.org/eng/xw/t242662.htm

Jiang, Wenran. 2007. “Sino-Canadian Relations Enter Unchartered Waters.” *China Brief*, vol. 7, issue 12, pp. 1-3. (June 13)

Jisi, Wang. 2004. “China’s Changing Role in Asia.” *The Atlantic Council-Asia Program*, January. http://www.acus.org/library-by_program-asia.asp

Kang, David.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pp. 57-85.

Keith, Ronald C. 1992. “China and Canada's ‘Pacific 2000 Strategy’.” *Pacific Affairs*, vol. 65, no. 3, pp. 319-333. (Autumn)

Lardy, Nicholas. 2007. “Note on Export Prices, Productivity Growth, and RMB Appreciation.” Peterson Institute for Int'l Economics. (April)

Lu, Shumin. 2005. “China-Canada Relations; 35 Years and Beyond.” Speech by Ambassador Shumin Lu at NPC Newsmaker Lunch on October 12. http://www.fmprc.gov.cn/eng/wjb/zwjg/zwbd/t216344.htm

Morrow, James, Randolph M. Silverson, and Tressa Tabares. 1998. “The Political Determinats of International Trade: The Major Powers, 1907-9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pp. 649-662. (September)

Paulson, Henry. 2007. “The Long-Term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Getting It Right.” Speech of Henry Paulson at the Heritage Foundation. (June 5)

Peterson Institute for Int'l Economics. 2006. “China Trade Disputes-Rising Tide, Rising Stakes: CNOOC Case.” (August)

Ryn, Claes G. 2003. “The Ideology of American Empire.” *Orbis*, Summer, pp. 383-397.

Shambaugh, David. 1996. “Containment or Engagement of China?: Calculating Beijing's Respon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2, pp. 180-209. (Fall)

US-China Business Council. 2007a. “China's Trade Relations.” (June)

_____. 2007b. “110th Congress, First Session legislation Related to China.”

(November)

_____. 2007c. “US Export to China by State 2000-2006.”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6. “US-China JCCT Outcomes on US Request.”

_____. 2007. “China Trade Summary.” (March)

US Department of Treasury. 2006. “The First 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Fact Sheet.” (December 15)

_____. 2007. “Second Meeting of the 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USTR. 2006. “US-China Trade Relations: Entering a New Phase of Greater Accountability and Enforcement, Top-to-Bottom Review.” (February)

US Census Bureau. 2007a. *World Trade Atlas*.

_____. 2007b.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July 2007.” (September)

新华网. 2007. “Senior Official Warns Economic Overheating Due to Excess Liquidity.” http://www.xinhuanet.com (November 8)

人民网. 2007. “China Hopes Japan to Recognize Its Market Economy Status as Early as Possible.” http://english.peopledaily.com.cn (December 3)

中国日报网. 2007a. “China Needs US$650b Forex Reserves.” (April 2)

_____. 2007b. “Wu Yi said the Strategic Talks are a Complete Success.” (May 24)

_____. 2007c. “China unveils US$32.6b Hi-Tech Purchases from US.” www.chinadaily.com.cn (May 31)

●● 웹사이트

Canada's National Statistics Agency. http://www40.statcan.ca

US National Trade Data. http://tse.export.gov

China's Recent Trade Policy to North America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Jae-Woo Choo and Mihn-Soo Kim

---

1. China's Diplomatic Security Policy and its Strategy toward North America

This part of the monographic attempt analyzes the impact of politic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North American on their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The work asserts that there is no direct, causal linkage between political influence and the outcome of economic relations.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politics, however,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per se, as well as the outcomes. Politicization of the economy still plays an extensive role. It would be too naïve to assume in today's global politics that economic interests can be secured through economic measures and only by those measures. Negotiations and bargaining are all processes of politics. Hence, the stronger the power a state has, the greater its leverage usually is. Nevertheless, strong and developed states more often tend to outsource the causes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In other

words, they have a great propensity to blame the relatively weaker ones for intrusion-like advancement into their markets, thereby undermining the extant industrial fundamentals with cheaper products. From the developed states' perspectives, a scapegoat is necessary for decision-makers (usually lawmakers) to appeal to their constituencies and nation, thereby covering up their poor management of the nation's economy. Cognizant of the domestic effect on the trade disputes arisen from the US, China has shown a great deal of patience and cooperation, as it has in the security realm. China has been resilient in abiding by the principle of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and this principle remains effective in China's economic and trade negotiation strategy.

2. China's Trade Conflicts with North America and its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and trade, the most important background for the trad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is that China's economy has been growing very fast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policy. In fact, China has been depending on investment and export for its rapid economic growth. In this process, China has become a major exporting country in the global trade system, especially after its accession to the WTO. On the contrary, the US, which is the major export market for China, has been suffering from an enormous trade deficit and has accused China of being a major cause of the deficit. So, the US is demanding that China appreciate the value of the RMB and further the opening of the Chinese market.

China, however, has been making a resolute stand regarding the appreciation of the RMB, since China does not want to create any policy that might cause a negative effect on the current trend of economic growth. So,

China wants to make gradual changes while trying to reduce its expanding trade surplus in order to ease the trade conflicts with the US. For example, China has been cutting back on its export subsidies,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solving various market barriers. China has been trying to amend the unfair trade practice of which it has been accused by the US in order to ease the trade conflicts. Also, China has been reducing its export value-added refund rate and restraining its process trade in order to reduce the trade surplus. All these efforts, however, have not been efficient for stopping the expanding size of it trade surplus.

Therefore, the anti-dumping disputes, countervailing duties, and WTO lawsuits against Chinese exports have recently been increasing. Also, new trade conflicts are emerging, including as a rising concern for the safety of Chinese products and foods. China has been confronting these conflicts with soft and hard measures simultaneously. Externally, China is counteracting by criticizing the political aspect of the conflicts; but China is simultaneously conceding and cooperating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s. Moreover, China is internally trying to improve the quality and safety of its exports and to advance into high-tech industries by upgrading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Now that China has risen as a major economic and trade power, its measures for counteracting the trade conflicts are also becoming more divers, with more impact on the global market. So far, China has been rather passive about the conflict in order to focus on its economic development, but now more active trade policies are beginning to show up. China has been reinforcing its defensive and offensive capabilities by acquiring more market economy status and fixing its trade remedy laws. Recently, however, China has been raising its voice that it can use its $1.4 trillion of foreign reserve to counteract “unfair trade pressure” and take an appropriate role in the global

market. For example, China can implement a policy to diversify its foreign reserves or to sell out its shares of US bonds to counteract the conflict over the RMB. Also, China can use its foreign reserve to facilitate its local firms to undertake global mergers and acquisitions, or form a sovereign wealth fund in order to take an influential role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The implication of the trad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is that China is opening its domestic market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conflicts. When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 begins, one of the major interests for Korea will be accessing the Chinese financial and services markets. China, however, will not allow Korean firms to access its market any more than the US-requested level; however, Korea can still acquire more amicable conditions through the FTA negotiation. So, Korea should use the US-China agreement as leverage to take an active role during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 to increase its access to the Chinese.

KIEP 발간자료목록 | 2006~07. 12

■ 연구보고서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흥종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 · 이홍식 외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 · 김혁황 · 김민성 · 박철형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 · 박제훈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 · 이장규 · 박현정 · 여지나 · 배승빈 · 조현준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 · 오용협 · 원동욱 · 나승권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 · 이형근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 · 최윤정 · 정재완 · Prabir De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 · 채 욱 · 한홍렬 · 신현준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종 · 신정완 · 이상호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곽재성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2007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종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07-02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07-0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07-0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
권율 · 정재완 · 이재호

07-05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
김한성 · 배희연 · Jeffrey Robertson

07-06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07-0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07-08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
박영호 · 허윤선

07-09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채 · 오민아

07-10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김원호

07-1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
김박수 · 홍유수 · 이철원 · 김균태 · 오태현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 이재영 · 한종만 · 성원용 · 이광우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 이재영 · 신현준 편저

■ 지역연구시리즈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 이 근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 · 김완중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 훈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 Anjan Roy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 방향 / 인남식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 · 허길행 · 유철 · 최미애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안덕근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 · 김민수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정 훈

07-11 차베스 에너지 정책의 형성 배경 및 전망 / 임배진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 김영철

07-13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 이상현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07-16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07-02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 Korea FTA / Zhang Jianping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오 · 유성준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재완 · 김동현 · 박근형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 세미나자료모음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07-06 **한·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 안준성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 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 · 고희채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혜정

■ Working Papers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07-05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 Chul Chung and Bonggeun Kim

07-07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 Jung Hur and Backhoon Song

07-08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 Hankyoung Sung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단행본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 · 외교통상부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홍종 · 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재우(朱宰佑)

미국 웨슬리언(Wesleyan) 대학교 졸업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석사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박사
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 부교수(現, E-mail: jwc@khu.ac.kr)

저서 및 논문

"China and Northeast Asian Regionalism: From An Outside-in Perspective" (2006)
"Energy Cooperation Problems in Northeast Asia: Unfolding the Reality" (2006)
"Six-Party Talks and Conflict Prevention and Management: Prerequisites Fulfilled?" (2007)
"Mirroring North Korea's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Political Ramifications" (2008) 외

김민수(金民洙)

미국 U.C. Davis 경제학과 졸업
중국 北京大學 光華管理學院 경제학 석·박사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SONAS) 조교수(現, E-mail: msakim@incheon.ac.kr)

저서 및 논문

『중국의 경기과열과 긴축정책이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2004)
『중진국 함정과 2만불 전략』(공저, 2005)
『현대중국의 이해』(공저, 2005)
"The Growing High-Tech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China, and New Challenge for Korean Firms" (2007) 외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Regional Study Series 07-09
KIEP Series for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07-09-02

China's Recent Trade Policy to North America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Jae-woo Choo and Mihn-Soo Kim

본 연구는 중국의 대(對)북미 통상전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외교안보면에서 중국은 자국에 대해 취하는 미국의 통상조치가 순수한 경제적 의미의 접근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정치적 동기부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국발 통상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경제통상 측면에서 중국과 북미국가 간 통상마찰의 가장 큰 배경은 개혁 · 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부상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환율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무역흑자를 줄이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소하여 통상마찰의 원인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미 · 중 간 통상마찰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적 위상에 맞게 대응전략을 다변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한국은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 시장 접근도를 제고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지렛대 삼아 한 · 중 FTA 협상에서 능동적인 협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60990 94320
ISBN 978-89-322-6099-0
ISBN 978-89-322-6089-1(세트)

정가 5,000원